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미래를 바꾸는 힘!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발 간 사



### 규제혁신은 지역발전의 핵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상황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후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되어 있고, 경제성장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이 없으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삶의 터전인 각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점에서 우리 기업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역할하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은 필수조건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가 혁신을 통해 제2의 벤치 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개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행태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직된 법령해석, 소극적 행태 등이 큰 장애요인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사후 징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규정을 완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강화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임증 책임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은 미래형 신산업 지원, 기업애로 해소,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개 분야 3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각 사례에서 보듯 각 지자체 공무원이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난해한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한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범사례들이 전 지자체로 확산되어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고사성어에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한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란 표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를 타파하여 해가 갈수록 더욱 살기 좋고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미래형 신산업 지원

## PART 1

01_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	8
02_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애로 해소	11
03_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15
04_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인허가 규제 개선	18
05_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21
06_ 자율주행 AI 실험용 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24
07_ 드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제구역 규제개선으로 시험비행장 조성	27
08_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32

## 기업애로 해소

## PART 2

01_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준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38
02_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43
03_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	48
04_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54
05_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59
06_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61
07_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70
08_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74
09_ 현장중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다!	78
10_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82
11_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를 13조 시장 진입	84
12_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94
13_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99
14_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민간투자 활성화	102
15_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애로사항 해소	105
16_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108

## 주민생활 불편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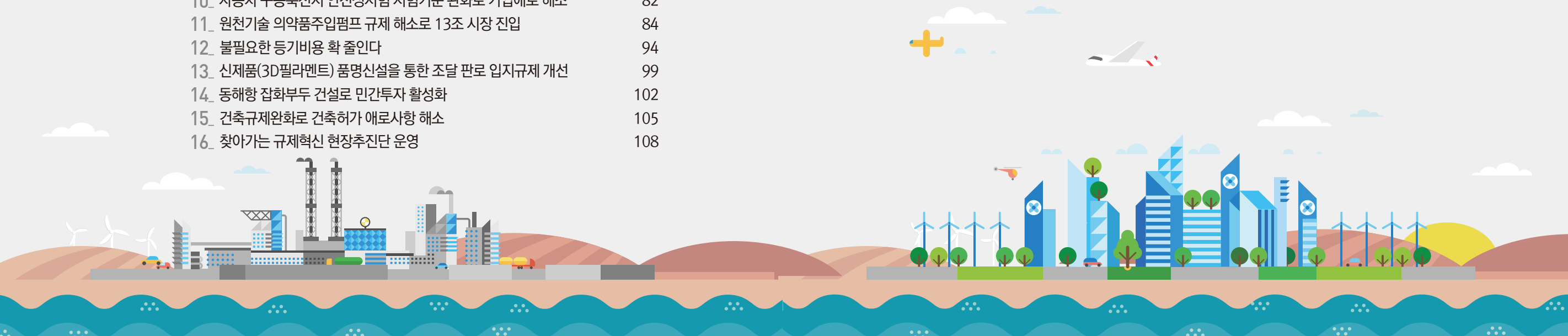
## PART 3

01_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116
02_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121
03_ 서해5도 어장확장으로 평화와 경제의 바다 열어 간다	124
04_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127
05_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129
06_ '뚝뚝혁신! 생생행정!' '제도개선 동아리' 를 통한 '건축규제 혁신'	134

## 사회적 가치 실현

## PART 4

01_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141
02_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 산정기준 사업자자원 신설로 소외지역 공급방안 해소	147
03_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149
04_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 개선	153



# 미래형 신산업 지원



## 1 PART

8	01_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
11	02_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애로 해소
15	03_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28	04_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인허가 규제 개선
21	05_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24	06_ 자율주행 AI 실험용 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27	07_ 드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제구역 규제개선으로 시험비행장 조성
32	08_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01 | 대전광역시 |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



왜! 대전 드론업체는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 하나요?



대전시는 전국 최고수준의 드론(무인기) R&D 역량과 항공우주연구원 등과 같이 항공기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기술의 드론완성품 업체 9개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8개사 등 드론 완성품업체가 전국(전국 40% 집적)에 비해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연구원 반경 약 19km, 대전 전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 없어 드론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전남 고흥 등으로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대전시는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드

론비행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답사,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당위성 설명 등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드론공원 조성에 따른 불안감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의견 보완, 무인기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한 종합비행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규제혁신, 전국 최초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확보 및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고 드론업체의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전 드론공원은 RC동호인 등 시민에게도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도약을 위해 야간비행 등의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 !

# 02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애로 해소



신기술 홍보창구와 공개된 경로를 통한 신기술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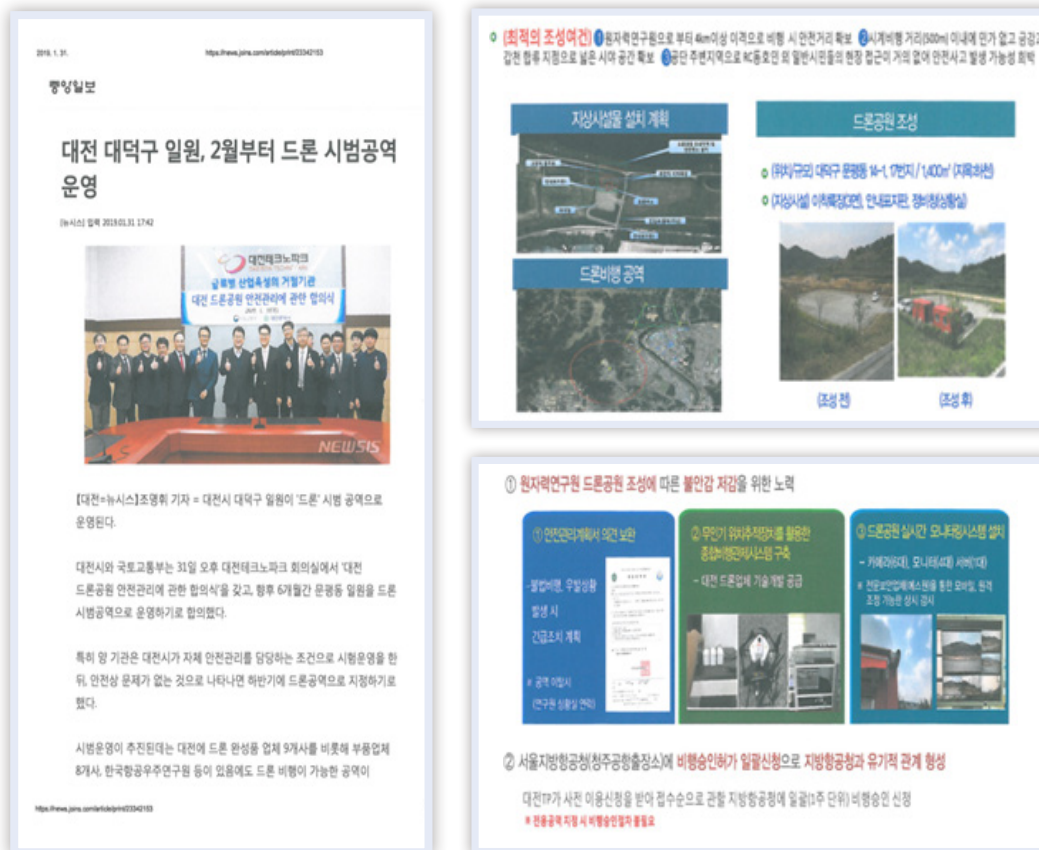


신기술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 부처별 신기술 홈페이지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신기술의 통합검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특허 기술에 대한 자료 부재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확대 보급 기반이 미흡하여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정보 검색이 어려웠다. 아울러 민간 업체에서는 신기술의 홍보창구가 부족하였으며,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는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실무부서 자체방침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유착관계 및 청탁 등에 따른 특혜논란으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특혜의혹을 피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었다.



애로사항해소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신기술기업의 홍보창구 부족과 공공기관에서의 신기술 활용의 애로



대전 드론공원 시범운영('19.1.31. 중앙일보)



사항을 해결하고자 2017년 7월 대구시 감사관실 자체인력으로 신기술플랫폼 T/F를 구성하였다. 자체 회의 및 연구 과정을 거쳐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10개의 정부인증신기술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신기술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발표 및 회의 30회, 신기술인증기관 방문(2개 기관)과 지역신기술보유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3회 등을 시행하여 신기술 시책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및 운영매뉴얼을 구축하였다.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당초 각 부처별로 인증하는 10개의 신기술과 대구·경북 지역 특허를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통일하여 등록하여 모든 신기술을 한곳에서 동시에 검색·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신기술등록을 위한 등록심의, 신기술선정을 위한 활용심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를 위한 테스트베드 심의 등 신기술의 등록과 활용을 위하여 자격증, 경력, 학력 등에 따른 전문가 자격요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여 각종 심의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정부인증신기술 등록 및 전문가 그룹 구성으로 제도의 초기기반을 구축하고 각 유형별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미인증신기술의 플랫폼 등록을 위한 등록심의 시행 및 신기술 선정을 위한 활용심의를 시행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기술심사과가 신설되면서 플랫폼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잠재되어 있는 지역 미인증신기술을 발굴하여 테스트베드 심의 평가를 통한 지역 신기술의 전국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각종양식,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제도 관련 업무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담당자 및 수요부서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운영 매뉴얼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신기술 활용 프로세스를 확립하였고 2019년 9월 10일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훈령 제1284호)을 제정하였다.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홈페이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민간업체의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하고, 신기술 선정시 활용심의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신기술 선정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공직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 업체불만 해소와 신기술선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책임소재 및 부담을 해소하였다. 또한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지역에 잠재된 신기술을 발굴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시공을 통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체의 시장진입 및 신기술개발 동기를 유도하고 기술개발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신기술 초기시장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대구광역시

# 03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산업간 융·복합시대에 맞춰 산업단지에도 탄력적 입지가 허용되어야 해요!



추진배경

대구시는 지역 연관 산업 발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국가산단에 첨단물류기업인 A사 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대규모 전자상거래기업 물류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지역 고용창출, 투자확대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구역 입지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허됨에 따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첨단 물류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 및 유치를 위해 국가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용지 변경 건의 등 2년 이상 국토부·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신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입지 허용 필요성, 물류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파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한



##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서비스 시행

2019년 04월 08일 금요일 13:37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첫선' 10개 분야 신기술·특허 등록**

**공공기관 활용 가능...지역 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대구시가 '신기술플랫폼 서비스'를 4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대구시에 속해 있는 10개 분야(신기술·특허)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 기업에게 테스트베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 대구 '신기술플랫폼' 전국서 벤치마킹 열풍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00:21 현재

시, 민간기업 기술 공유체계 구축을 첫 시행...신기술 305건 등록

대구시의 민간기업 기술 공유 체계인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 市 신기술플랫폼, 전국 최고 행정 우수사례

2019년 08월 29일 목요일 12:21 대구경제

**행정부 규제 혁신 실적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서비스가 행정부 규제 혁신 실적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서비스가 행정부 규제 혁신 실적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서비스가 행정부 규제 혁신 실적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중소 혁신기술 건설현장에 폭넓게 활용" '신기술 플랫폼' 지자체로 확산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00:11 현재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플랫폼'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대한 콘텐츠의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 플랫폼 오른 신기술 "잘 나가네"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00:11 현재

대구시, 2년 간 30건 사업화 지역업체 신기술 12건 적용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서비스가 2년 간 30건 사업화 지역업체 신기술 12건 적용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 2019년 1월 마침내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산업부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2019.4월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의 국가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대규모 전자상거래기업 A사는 총 3,100억 투자 결정 및 고용 창출 2,000명을 목표로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전기화물차 물류 배송으로 인해 지역 중점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 A사 첨단물류센터 건립

- ▶ 사업기간 : '19.10월 ~ '21.6월
- ▶ 위치 및 부지면적 :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 78,800㎡
- ▶ 사업내용 :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 건립  
(투자 3,100억, 고용 2,000명)



항공물류센터투자계약('19.1.31. 중앙일보)



# 04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인허가 규제 개선



미래산업을 권장한다면서 왜 허가를 안해주나요?



추진배경

곤충산업은 식량, 의약, 신소재,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성비가 우수한 '핵심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곤충시장은 2007년 11조원 규모에서 2020년 38조원 이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곤충산업을 미래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만 제출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곤충사육장 검토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건축부서에서는 곤충의 가축여부를, 축산부서에서는 축사 건축물의 법적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연출되는 등 지역마다 신고처리 과정이 상이하여 오히려 곤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충주시에서는 2016년 3월 <찾아가는 규제발굴>을 통해 곤충사업 인허가로 애를 먹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충주시는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농림축

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하여 2018.12.31. <곤충산업법>에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신고 간주제를 도입했으며 건축물 관련 유권해석을 공문·매뉴얼 등을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 및 기관에 시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곤충산업법

### 변경 전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후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생산업·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전국 곤충사육업 신고절차가 통일되고 명료화됨에 따라 곤충창업 기반이 구축되었다. 도면 작성, 건축물 법적성격 판단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되며 행정처리를 위한 농가의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되었고 곤충산업의 다양한 형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곤충산업 2조원 시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간에 따른 신고간주제 도입



전라북도 완주군

# 05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미래산업을 권장한다면 왜 허가를 안해주나요?



추진배경



전북 완주군 소재 (주)프로파워(현 가온셀)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기술 인증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연료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프로파워는 지게차의 배터리를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수소연료전지 판매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국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연료전지 수요처에서는 기술력 및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프로파워는 두가지 종류의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고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완주군에서는「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안전을 접수하여, 현행



곤충관련 언론보도



다양한 곤충산업 형태(규제 사각지대)

**충청매일**  
충주시 조남식 주무관,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충주시 대소음면 근무하는 조남식(과·사진) 주무관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사육장 규제 개선으로 본격화 한 제품의 발표를 통해 시·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곤충산업법에 곤충사육업과 곤충사육장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을 인정하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곤충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 곤충사육업 신고 시 모든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대회에도 충주시 대표로 참가해 건축법령을 개선한 견보의 규제개선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 성과로 조 주무관은 2017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회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충청·세종권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충주시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 시는 조 주무관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지방규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장관기업관장지도 평가에서 경제활동 진화성 부문 2년 연속 5등급,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 A등급을 받아 충북 1위를 차지했다. 박연수 기자 14.0 X 10.4 cm

보도자료 (2018. 9. 19. 충청매일)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인증기준의 범위를 수소지게차 연료전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17. 4.)하였다.

하지만 해당 안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결정되어 문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기업은 기술개발 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증기준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더 늦어질 경우 세계시장 선 점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다시한번 해당부처에 건의과제를 제출하기로 하고, 연료전지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치(定置)용’으로 한정된「고분자(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인증」범위를 바꾼 달린 ‘이동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18. 5.)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 전북지역「규제혁신 현장간담회」등을 거쳐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KS C 8569) 개정(19. 6. 28.)을 이끌어내었다.



수소지게차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연료전지(DMFC, PEMFC)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소지게차 상용화가 가능해졌으며, (주)프로파워(현 가온 셀)는 추후 효율성과 편의성 확인 절차를 거쳐 전동카트·스쿠터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1,93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2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42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프로파워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 국가표준

표준번호	KS C 8569												
표준명(한국)	연료전지 차량												
표준명(영문)	Fuel Cell System												
표준분야	IC 전기전자 · IC200 제반 전기 기기												
표준구분	기술												
제정일	2015-07-04												
최종개정확정일	2019-06-28												
기술입력처	에너지 기술정책원(AIST, KETEP, KRIIT)												
전문위원	연료전지기술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고분자연료전지(DMFC) 시스템, 직접연료전지(DLFC)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처	국가기술위원회												
담당부서	기술정책(산업정책과)												
담당자명	이영희												
담당자 연락처	043-670-5379												
국제표준 부합성	<table> <tr> <th>대응 국제표준</th><th>부합성 수준</th></tr> <tr> <td></td><td>적용 없음</td></tr> </table>	대응 국제표준	부합성 수준		적용 없음								
대응 국제표준	부합성 수준												
	적용 없음												
인용표준	12.23												
KS Code	KS0000												
KS원문보기	<a href="#">PDF view</a> > <a href="#">KS원문보기(간접 관부 고지사항)</a> > <a href="#">아무것도 없음 (공공재)</a> > <a href="#">KS원문보기</a>												
표준이력사항	<table> <tr> <th>개정일자</th><th>구분</th><th>고시번호</th><th>제정/개정/폐지 사유</th></tr> <tr> <td>2015-07-04</td><td>제정</td><td>2015-02-23</td><td>신에너지기술개발사업(가온 셀)에 따른 제정</td></tr> <tr> <td>2019-06-28</td><td>개정</td><td>2019-01-30</td><td>직접연료전지(DLFC)시스템 포함 확대 개정</td></tr> </table>	개정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2015-07-04	제정	2015-02-23	신에너지기술개발사업(가온 셀)에 따른 제정	2019-06-28	개정	2019-01-30	직접연료전지(DLFC)시스템 포함 확대 개정
개정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2015-07-04	제정	2015-02-23	신에너지기술개발사업(가온 셀)에 따른 제정										
2019-06-28	개정	2019-01-30	직접연료전지(DLFC)시스템 포함 확대 개정										

에너지 표준인증 KS C 8569 개정





| 대구광역시 |

## 06 자율주행 AI 실험용 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판매를 위한 차량도 아니고, 자율주행 실험용 차량인데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자기인증 요건을 좀 완화해 줄 수는 없을까요?



추진배경

기도 안양시는 2017년부터 기업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특히 신산업 분야에 규제의 산재로 테스트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규제혁신」을 핵심시책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때마침 '17.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입한 테스트 차량이 국내 자기인증 요건 불충족으로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기술개발에 큰 애로가 있었던 기업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안양시 소재 S사는 자율주행차 AI와 전장부품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로 대중교통 실증을 위한 무인중형전기버스 AI개발을 위해 실험용 전기중형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국내엔 전기중형버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선 다양한 테스트용 전기차량의 확보가 요구된다)

통상 자율주행AI의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일반도로 테스트'를 통해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성능과 부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요건에 부합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업체의 수입 테스트용 전기중형버스가 국내 자기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업체는 자율주행AI와 전장부품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큰 애로가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안양시가 이러한 애로를 접수하고 소관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테스트용 수입차량이 '19. 6. 21. 국토교통부의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규제가 최종 개선되기까지 지난 2년간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등에 10여 차례가 넘는 규제 개선 건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학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자기인증 요건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10여 차례 진행하였으며 동종 산업군에 있는 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규제를 재확인하였다.

자기인증 관련 법령 · 지침의 난해성과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의 전문성을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극복하며 설득력 있는 건의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과제를 이십여 차례나 보완하기도 하였다.

특히, '18. 7. 국토교통부의 건의과제 불수용에 따른 재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가 합동으로 기업 현장방문('18. 9. 7.)」을 실시하였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시로 국무조정실의 담당 전문위원과 소통하며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자율주행 기술의 다양성과 고도의 전문성, 자동차 부품 및 성능에 관한 지식 및 관련 법령의 난해함, 기관 또는 전문가마다 다른 견해, 기업 우호적 전문가 발굴의 어려움, 국내 최대의 자율주행 시장인 소관부처에 대응해야 하는 조심스러움, 소관부처 간 갈등 등 추진상의 장애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공유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가는 해외기술 추격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하루 빨리 국내 자율주행 산업군의 확산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주변에 많은 질책과 회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였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0월부터 10차례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18. 12월 S사의 자율주행 테스트용 수입차량은 자기인

증을 면제받게 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차량 검사를 통해 안전한 차량임을 인정받아 '19. 6. 21. 드디어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19. 6. 22. 서울시, 국토부, 과기부 주관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월드컵북로 1.1km 구간 운행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규제의 개선으로 다양한 일반도로 테스트를 통한 자율주행 AI 지능을 높이고 전장 부품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율주행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세종 스마트시티 지선버스 자율주행 공유 운영 프로젝트에 참가예정). 이로써 기업은 연 1,000억 이상의 매출과 연 1,000억 이상의 투자, 그리고 연간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 등 150여개의 자율주행 관련 산업군의 성장도 기대된다.

또한 이 규제개선이 마중물이 되어 안양시가 이스라엘 자율주행 선도기업과 국내 리딩기업과의 자율주행 도심실증 및 상용화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도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내일신문(2019. 6. 21. )

경기도 성남시

# 07 드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제공역 규제개선으로 시험비행장 조성



관제공역 내 드론기업이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남시는 면적의 82%가 관제권에 포함되어 56개 드론기업은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드론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강원도 횡성 등으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드론기업 R&D에는 테스트가 6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산업의 특성상 조기상용화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여 테스트베드는 너무나도 절실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017년 11월에 56개 드론기업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통제 능력, 드론의 비행고도 분석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에 유인항공기의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지역에서 기업체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관제공역 드론 시험비행장의 필요성을 국무조정실 주재 신산업규제혁신위원



회 무인이동체분과위 회의를 통해 공론화 시켰으며, 민·관·군 관계기관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57회의 실무협의를 통해 성남시 공무원이 시험비행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시험비행장 조성에 합의하여 2019. 2. 18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곳의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였다.

### 업무협약을 통한 관제구역 내 드론비행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관제구역 내 기업체의 드론비행 불가	조지부성	①코이카 운동장 반경 0.9km	②성남시 청사 부지 반경 0.9km
	활용날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통보한 드론비행 가능일자 주간에 운영(평일, 주말, 공휴일)	
	대상	성남시 소재 민간업체 시험비행용 무인비행동력장치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 2019. 4월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 공역을 이용해 개발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실험장이 조성되었다.

기업체들은 테스트를 위한 이동경비·시간이 절감되며, 조기상용화를 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의 성장발판이 마련되었다.

‘26년까지 테스트관련비용 절감, 조기상용화 효과, 드론수요 창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로 79,000명의 고용창출효과 3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시험비행장을 이용한 기업체의 테스트비행

朝鮮日報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A16면 사회

## 1년 반만에... 판교 스타트업, 밖에서 드론 날린다

경기일보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005면 종합

## 성남시, 관제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

경기신문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009면 지역

## 성남 공항공제구역에 전국 첫 드론 시험장

시·제15특수임무비행단 업무협약  
코이카운동장 등 3곳 개방 운영  
드론기업, 개발제품 시험비행 점검

은수미 시장 “드론관련 56곳 소재  
비행단과 지속 협의 기업으로 해결”

성남시의 관제구역(管制空域)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들이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됐다.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구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8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관제구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험비행장 운영·감독을 맡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상에서 협의를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시청사 옆 여수동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관제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시험비행장에서는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시가 시험 비행을 통제·감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한다.  
드론 기업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을 받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승인을 받은 절차를 통해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콘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상에서 협의를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8일 (왼쪽부터)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대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형 항공안전기술원장이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은 시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며 “4차 산업의 확대와 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는 기업에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며 “4차

인천일보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009면 메트로

## ‘드론 성남’... 시험비행장 3곳 조성



관제구역에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공항 인근 시흥·여수동 등  
무인비행기·헬기 상용 시험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에서 자리 잡은 관제구역(管制空域)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3곳이 조성된다.  
성남시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험비행장 운영·감독을 맡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상에서 협의를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판교에 드론 관제구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험비행장 운영·감독을 맡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상에서 협의를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며 “4차 산업의 확대와 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는 기업에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며 “4차

시험비행장에서 승인을 받은 절차를 통해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콘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상에서 협의를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2019. 02. 19.)



## 인. 터. 뷰. INTERVIEW

성남시 토지정보과 \_ 김기한



### 공직자의 적극 행정이 신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한다.

2009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10여년 만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나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등의 최첨단 ICT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발달된 ICT산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지만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은 서울공항 관제권 규제로 기업체가 제작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테스트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안전과 보안의 민원에 부딪쳐야만했습니다. 너무도 절실함이 큰 규제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적

극적으로 지자체가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통제관이 되기로하면서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군 이 문제에 매달려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제공역의 난제를 풀어 나갔고, 은수미 성남시장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직접 국방부를 찾아가는 등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전국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드론조종자 규제중 관제권 규제 해결은 가장 큰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 시대의 화두인 민간부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 유치,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부산광역시

# 08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 드론에 규제가 있나요?



## 추진배경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승인이 장기간(최소3일전) 소요되어 초고층건물 화재 시 드론의 긴급 현장투입이 불가하고, 비행승인 고도 제한(지표높이 H=150m)으로 초고층도시 부산(50층 이상건물 전국 대비 34%)의 여건 상 지표와 건물높이의 차이로 기술적 드론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 그리고 소방용 드론의 긴급상황 적용범위가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되어 있어 초고층 건물 화재·풍수해·수질오염 시 긴급점검을 위한 선제적 투입이 곤란하고, 야간 등 특별비행 승인 검토기간도 장기간(90일) 소요되어 효율적인 드론 비행에 제약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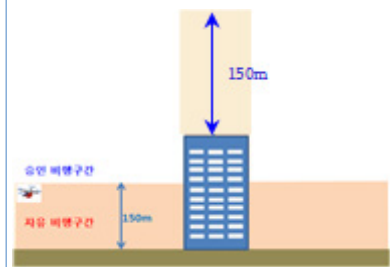

## 규제혁신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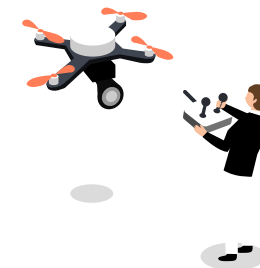
부산시는 2018년 1월경 「2018드론쇼 코리아」행사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중 해당 과제를 접수 받아 2018년 2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및 국무조정실 방문하여 드론비행의 규제에 대한 협의, 2018년 4월 국무조정실, 소방안전본부와 규제개선 관련회의 등 공론화를 거쳐 2018년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다.



## 그 결과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① 관제권	사전승인 후 비행(최소 3일전)	유·무선통보 후 비행(즉시)	
② 비행 금지구역	사전승인 후 비행(최소 3일전)	유·무선통보 후 비행(즉시)	
③ 고도 150m 이상	 <p>지표(건물) 높이 150m 이상</p>	 <p>◆ 드론 반경(150m) ◆ 최대 지표(건물)의 높이 150m 이상*</p>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항공기 운행고도 등을 고려해서 자유 비행구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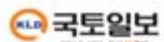


## 긴급 상황 시 사전승인 없이 무인기 비행 가능

앞으로 수색이나 구조 등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드론 같은 무인기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비행금지 구역이나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사흘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또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지만, 사람이나 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2018-11-21)  
김현우기자 [hwmw12@ytn.co.kr]

( YTN 2018.11.21)



## 국토부, 드론 규제 개선...쉽고·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산업 활성화 기대

2일 전경련회관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대국민 의견 수렴 후 이달 개선안 확정 방침

	현행	개선(안)
기체 신고-일소	비사업용 - 12kg 초과시 신고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사업용·비사업용 -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 250g~7kg 소유주 등록(1,400J 초과시 신고) - 7kg 초과시 신고
비행 승인	25kg 이하 - 관제권(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25kg 초과 - 비행승인 필요 150m 고도 초과 비행 - 비행승인 필요	250g 이하 - 공항 주변(3km)에서 비행승인 필요 250g~25kg - 관제권(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25kg 초과 - 비행승인 필요 150m 고도 초과 비행 - 비행승인 필요
안전성 인증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조종 자격	비사업용 - 불필요 사업용 - 12kg 초과시 조종자 증명 취득 및 (필기+실기)	사업용·비사업용 -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 250g~7kg 비사업용 고위험(1,400J 초과) 불가·비행금지 - 7~25kg 필기+비행경력 - 25~150kg 필기+실기

다양한 공중산업 형태(규제 사각지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한 산업과 레저 영역에서 주목하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일명 드론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뤄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를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국은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총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12kg 초과하는 비사업용 기체와 무게와 무관한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용의 경우 조종자 증명 취득도 필요로 하고 있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 등 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유럽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각국은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시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한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무게 250g 이하인 기체 가운데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20m 고도 이하 등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로 정의됐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가운데 1,400J(줄) 운동에너지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가운데 일정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체다. 현재 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25kg 무게 중 14,000J 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다. 개선되는 분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 입증 ▲조종자격 등이다. 먼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안전성 인증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했다. 조종자격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다.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일보

# 기업애로 해소



## 2 PART

- 38 01\_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준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 43 02\_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 48 03\_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
- 54 04\_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 59 05\_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 61 06\_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 70 07\_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 74 08\_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 78 09\_ 현장중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다!
- 82 10\_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 84 11\_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로 13조 시장 진입
- 94 12\_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 99 13\_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 102 14\_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민간투자 활성화
- 105 15\_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애로사항 해소
- 108 16\_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 | 대구광역시 |

01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준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 및 검사기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 추진배경

일반적으로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7조에 의거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로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시험·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의료기기보다 식약처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방사선에 대한 안전시설인 차폐시설(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험·검사 역시 차폐시설 내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료기기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험·검사에 과도한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당연히 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조·수입·판매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방법을 혁신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시험·검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먼저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핵심규제를 발굴하였고,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19.2월) 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19.3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제도개선(안)은 시험, 검사기관이 보유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 즉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19.5월)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수용'의견을 받아냈으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혁신 '수용'의견을 받았다.('19.6월)

## 개선(안)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위한 사용허가 시에는 기기 단위에서 시험·검사기관 단위로 사용 허가 개선
- 시험·검사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의 최대 용량 범위를 정하여 시험·검사기관 단위로 사용을 허가하고,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는 별도의 허가 없이 시험·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허가용량의 범위를 벗어난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현행제도 유지



## 그 결과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  
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원자력안전위  
원회 허가를 위한 비용(기기당  
500만원 정도)도 절감하게 되  
었다.

이러한 허가기간 단축은 방사  
선 발생 의료기기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조기에 시장 진  
입이 가능함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수요를 기기개발에 적용함  
으로써 앞선 기술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06월 01일 토요일 002면 종합

### 대구 '스마트 웰니스' 내달 결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담회  
4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X-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진강기능식품 판매 규제 개정

대구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스마트 웰니스' 사업의 특구 지정 결  
과가 오는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국무  
조정실과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중  
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및 지역 기  
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규  
제혁신 현장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조정  
실 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특구 우선협약대상에 선정된 대  
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7월 중  
최종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  
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  
복합단지와 상서산업단지, 칠곡경북  
대병원 일대, 시청 발원 및 대구삼성  
병조캠퍼스(융합RD지구) 등 4곳이  
대상이다.

시는 2023년 7월까지 총사업비 1천  
억원을 투입해 ▷첨단의료기기 공동제  
조소 구축 ▷인체 유래 플라젠 적용 의  
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  
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  
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허가  
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제도 개선 ▷진

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첩·출입·검사  
제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차명제한  
기간 완화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등 10  
가지 항목의 규제 혁신을 건의하고 관  
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은 올 연말까지 X-선 발생장치 시험·  
검사기관은 안전성 등이 충족되면 최  
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강제 점검하도록  
돼 있는 진강기능식품 판매시설 점검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신규  
허가 받을 때 3년 기준인 차명제한기  
간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  
기로 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X-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19.06.01. 매일신문)

(19. 06. 01 매일신문)



## 인. 터. 뷰. INTERVIEW

대구광역시 미래산업기획팀장 \_ 황윤근



## 적극적인 규제해소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1999년 대구시에서 공직에 입문한지 20여년 동안 대부분을 기업과의 접  
점부서에서 근무한 저로서는 규제혁신분야에서 수상한 이번 상이 매우 자  
랑스롭습니다.

이 상은 저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제혁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  
신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대구시 동료직원들과 함께 이루어 낸 성과  
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2009년 유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산  
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의료기업의 매출과 고용의 성장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분야 보다 더욱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발굴  
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한 '방사선 의료기기 규제해소' 사례는 방  
사선 발생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번 규제 혁신에 일조한 저로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제도나 규제가 해소된다면 기업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좋은 일자리 또한 많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공무원 모두는 우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 대구광역시 동구 !

# 02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기업에게 유리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적용 방법이 없나요?



대구 동구는 침체된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시력교정용 렌즈 제조회사인 (주)이오에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하수도 요금부와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제조업 특성에 따라 물 사용량이 다르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을 수요자가 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수년간 불리한 요율을 적용받아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대구 동구에서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주)이오에스의 애로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 상담 실시, 신속처리제 안전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변호사의 자문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모니터단의 주민 의견 등으로 개선방



안을 마련하였다.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19.2월) 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19.3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와 함께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일반용, 공업용의 구분과 하수도 사용업종의 일반용, 산업용 요율 적용에 있어 요금부과 시스템의 단계별 절차를 기업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요금재조정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업-기관-부서간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시 변동사항 및 제조업별 특성에 따른 변동 추이를 감지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후 15일 만에 과납요금 환급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완료하여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기업애로를 처리하였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만족도 사후조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이로써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이 개선된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9.3.18. 처리결과 안내 방문



2019.7.2. 사후관리 재방문

경북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요일 005면 종합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대구 동구청, 기업민원 해결 호평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4일 동구청에 따르면, 행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 총 83건 중 심사해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날 동구청은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지역 내 기업의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급하고,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수요 중심의 법령해석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곳을 직접 방문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해 기업제검도 설문조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시행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동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6000만원을 받았다.

대구 동구,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통해 규제혁신 적극행정 추진

김영훈 기자 | 2019.09.19 17:38



(KNS뉴스통신=김영훈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2월부터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대구혁신도시 청탁재단 및 의료특구 입주기업 102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펼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공평공정하에 하수도사용료 합법변경 미신고로 인한 기업 손실을 상수도사업소와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며, 혁신도시 청년직업 고용비 확대 의견 등을 국무토론회를 유제개혁 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상담료 변해에 이천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합법종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 면허제 감면조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소통행정을 통해 멋진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생업현장의 숨어있는 민생규제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 kyo@kns.tv

관련언론 보도 (경북일보 2019. 09. 25)





인. 터. 뷰.

INTERVIEW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 \_ 이태영



## 입장을 바꿔보면 적극행정이 보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분야]

15년의 공직생활에서 주변 동료들과 업무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과가 있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더불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옆에서 해결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성과를 돌립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해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이 어찌면 참 다행이다 싶은 게, 노력에 대한 배신은 없다는 단순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고민과, 규제로 불편을 겪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다닌다는 것은 기업 임직원과의 상담 한 건에 최소한 30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기업이 최대 7개에 한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추울 때는 잠시 쉬는 시간의 편의점 호빵이,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에 감사해야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으로 환급소식을 받는 기업 임직원의 환한 모습을 생각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조용한 노력으로 개선의 혜택을 보고 침체된 지역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느 기업 임직원의 규제 애로사항이 남아있다는 것에 더 큰 의무감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 03 인천광역시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



경제자유구역 특허보세구역의 규제완화 필요하지 않나요?



추진배경

인천광역시는 2017년 12월에 영종국제도시내 (주)스카이로지스코리아와 총 사업비 1,700억(FDI 30% 포함)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투자유치 진행과정에서 사업자가 물류센터 필수조건인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투자유치 당시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 관할지역 1년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 시 신규지정 가능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관련 고시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상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5% 이상 증가해야 신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의 물동량 요건 미비로 특허보세구역 신청이 안 될 경우 이후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영업용 보세창고의 물동량 기준 완화 및 적용 제외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건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규모 및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8. 4. 19.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조사' 실시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영종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관련 고시개정 건을 제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주재「지자체 투자프로젝트 간담회(18. 7. 3.)」시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고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 첫 번째로 선정되어, 관련 부처 간의 고시 개정 에 대한 적극 추진으로 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8. 11. 12. 영업용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및 적용 제외 대상 확대내용을 포함한「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sup>1)</sup>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투자유치 당시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 관할지역 1년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 시 신규지정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영업용 보세창고의 요건) ① ~ ② (생략) 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새관장이 전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영업용 보세창고의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전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 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2.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4. 동일세관 관할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 5. 종합인증우수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 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 부세관별로 설정·운영하는 경우 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CD)	• 영업용보세창고 물동량 기준 완화 -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b>물동량 요건 완화</b>  • 물동량요건 적용제외 대상 명시 -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b>‘물동량요건 적용 제외 대상’을 고시에 반영</b> 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 결과

영업용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및 적용 제외대상 확대내용을 포함한 ‘특허보세 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9. 1. 31.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항공물류센터 건립단계 시에는 약 1,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17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2021년 물류센터가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4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와 약 1,100여명의 인구유입 및 약 1,2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참고 1. 영종 항공물류센터 조감도



위치도

※ 영종항공물류센터의 경우 적용 제외(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대상에 포함

<p>정부, 본격 규제 개선 첫 발...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 허용</p> <p><b>혁신성장본부, 특히보세구역 지정요건 바꿔 1,000명 고용할 수 있게. 이통식 수소충전소 상용화도 추진</b></p> <p>서울경제</p> <p>재무·정책 기자단   2018-07-12 12:14:00   경제뉴스</p> <p>한편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이통식 수소충전소는 상용화된다. 그간 규제가 많아 출시된 전방위 산업시설임에도 혁신성장을 통해 한 정부와 적극적인 조공은 법안 개정으로 나사기로 한다.</p> <p>기차역장부 혁신성장본부는 국제자유무역에 지원자가 단계가 연인내 36개 프로젝트 중 항공물류센터와 이통식 수소충전소가 추진되도록 장점을 얻었다는 12일 밝혔다.</p> <p>A7기업은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관과 관할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3년간 평균 통관량 대비 15% 증가해야만 추가 물품선박에서 지출 수 있는 특히보세 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예외를 받았다. 정부는 세관법 상향제도를 도입할 기준을 완화하여 내 제외로써 국경을 바쳐 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가 1,000억 규모의 센터가 생기면 고용창출 효과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p> <p>이통식 수소충전소는 그간 연구개발 목적으로 한해서만 허용받던 산업형 자동차용 및 개인형차를 전용으로 특례기관을 통하여 이통식 충전소 상용화를 지원하는 고시 개정으로 나 있다. 충전소가 상용화된 후 수자 이용자들의 충전 및 보급이 늘고, 충전소 설치비용도 고점치 500여만원의 3분의 1 이하인 1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p> <p>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나 기업이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도 국내에서 건설을 유예해왔으나 차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 <p>/경진학기자 koo@koreajournal.com</p>	<p>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기준 완화</p> <p>입력 2018-07-12 19:01 수정 2018-07-12 19:02</p> <p>도 특별히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특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통식 수소충전소에 대해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겠다. 추진하기로 했다.</p> <p>혁신성장본부는 12일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와 건립한 36개 주요 프로젝트,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및 이통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등 두 번째 1가 가시화되도록 일정을 예상하면서 관련자를 초청하고 있었다.</p> <p>(보) 서울항공 물류를 포함한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이외의 민간 항공보세구역에 지정요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p> <p>1위를 위한 세관 관할지사의 승인절차를 단축하는 3년 평균통관량 기준을 낮춘다. 이를 세관법 상향제도에 맞게 통관량 기준을 완화 또는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p> <p>2위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는 내 약 5천톤, 지상 5층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부가 특히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통합 개발안을 갖추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3위는 영종도 내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약 1700억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이통식 수소충전소로 대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신 규제를 추진한다.</p> <p>수소차 자율주행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밀집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이 30억원 수준에서 10억원대로 크게 감축될 것으로 전망은 기대하고 있다.</p> <p>www.koreajournal.com</p>	<p>한글서체 크기 폰트 배열 정렬 색상</p> <p>한글서체 크기 폰트 배열 정렬 색상</p>
------------------------------------------------------------------------------------------------------------------------------------------------------------------------------------------------------------------------------------------------------------------------------------------------------------------------------------------------------------------------------------------------------------------------------------------------------------------------------------------------------------------------------------------------------------------------------------------------------------------------------------------------------------------------------------------------------------------------------------------------------------------------------------------------------------------------------------------------------------------------------------------------------------------------------------------------------------------------	-------------------------------------------------------------------------------------------------------------------------------------------------------------------------------------------------------------------------------------------------------------------------------------------------------------------------------------------------------------------------------------------------------------------------------------------------------------------------------------------------------------------------------------------------------------------------------------------------------------------------------------------------------------------------------------------------------------------------------------------------------------------------------------------------------------------------------------------------------------	-----------------------------------------------------------------------------------------------

#참고 2-1. 중앙언론 보도현황 (2018. 7. 13.) -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경기일보	2018년 07월 17일 (화) 종합 03A면		2018년 07월 17일 (화) 종합 03A면
<h2 data-bbox="234 1047 488 1105">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 이륙만 남았다</h2> <div data-bbox="191 1155 488 1186"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기동화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지난 사업 개점</div> <p data-bbox="191 1205 488 1248">인천시 과천해방 부지개발 및 방위사업 개발 지역 사업 추진 결심 사업비 1,800억 원 투자 1,200억 원 조달자를 지역개발 총괄서 거쳐</p> <p data-bbox="191 1259 488 1321">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기동화자재도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 지역 사업과 함께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도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514 1151 714 1190">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514 1201 714 1317">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756 1151 956 1190">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756 1201 956 1317">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h2 data-bbox="1033 1047 1119 1105">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 이륙만 남았다</h2> <p data-bbox="996 1151 1156 1190">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996 1201 1156 1317">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h2 data-bbox="179 1340 297 1375">경인일보</h2> <h3 data-bbox="191 1387 714 1423">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연착륙'</h3> <p data-bbox="191 1450 354 1466">가동부 투자프로젝트 지난 1년째</p> <p data-bbox="191 1477 354 1493">경인일보 종합 03A면</p> <p data-bbox="191 1520 488 1678">인천시 과천해방 부지개발 및 방위사업 개발 지역 사업 추진 결심 사업비 1,800억 원 투자 1,200억 원 조달자를 지역개발 총괄서 거쳐</p>	<h2 data-bbox="545 1340 725 1375">인천일보</h2> <h3 data-bbox="651 1387 714 1423">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연착륙'</h3> <p data-bbox="651 1450 813 1466">가동부 투자프로젝트 지난 1년째</p> <p data-bbox="651 1477 813 1493">경인일보 종합 03A면</p> <p data-bbox="651 1520 948 1678">인천시 과천해방 부지개발 및 방위사업 개발 지역 사업 추진 결심 사업비 1,800억 원 투자 1,200억 원 조달자를 지역개발 총괄서 거쳐</p>	<h2 data-bbox="756 1340 873 1375">연천일보</h2> <h3 data-bbox="756 1387 956 1423">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연착륙'</h3> <p data-bbox="756 1450 919 1466">가동부 투자프로젝트 지난 1년째</p> <p data-bbox="756 1477 919 1493">경인일보 종합 03A면</p> <p data-bbox="756 1520 1053 1678">인천시 과천해방 부지개발 및 방위사업 개발 지역 사업 추진 결심 사업비 1,800억 원 투자 1,200억 원 조달자를 지역개발 총괄서 거쳐</p>	<h2 data-bbox="996 1340 1119 1375">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 이륙만 남았다</h2> <p data-bbox="959 1450 1156 1489">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data-bbox="959 1501 1156 1678">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과천해방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천해방 부지개발 지역 사업과 함께 자재도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참고 2-2. 지방언론 보도현황 (2018. 7. 18.) - 경기·경인·인천일보 등

[illegible]

#참고 2-2. 지방언론 보도현황 (2018. 7. 18.) - 경기·경인·인천일보 등

2019년 02월 01일 [금]  
종합 01A면

**중부일보**

**경제청, 영종에 항공물류센터 건립 투자계약**

**18만9천㎡ 규모·상반기 착공  
1천2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2일 오후 G타워에서 영종국제도시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자격을 제정했다.

서류심사는 지난 토요일(27~28일) 및 5일간(29~31일)과 1천200㎡ 면적 부지에 대한 입찰(30~31일)로 끝내 상반기 마감 예정이다.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건축사업은 다국적 기업들과 다국적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희망해 사업별 우선, 필수 조건제정 자유구역 개발에 30% 세율의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하반기 한국 코리안콜러에 선정되면 최대 영종국제도시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사업에 모태사업인 중흥이는 이

영종국제도시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

유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추진 논의를 시작했으나 관세청 특혜제도와 역외 지분에 난항을 겪으며 시공착공까지 지연, 인천시가 기존 운영방식에 대해서 부디포모직업, 자판기, 한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노력을 기울이기 해오고있다.

한편 인천대기개발사가 시의 전담조직을 찾는데 수월 하겠다라고 지적했으므로 사업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있다.

주요주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아파트와 외국인 투자자로서 도로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거래

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도시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에는 국내 최대자산관리권 구도를 장악하는 에프지 자산운용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식 전문 레스토랑 인천점에서는 영종 국제도시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력한다. 외국적으로도 지분을 합쳐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건축사업 또한 이런 투자계약 체결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빈틈없이 계속 선의, 각종 연회 등도 행정기관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 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

**기오일보**

2019년 02월 01일 [금]  
종합 01면

**산업부, DTC 서비스로 속도 바이오산업 ‘뒷심’**

(산보)바이오벤처 육성사업 지원

생물공학 산업 속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비스형 생물공학(DTC/Direct-to-Customer) 유전자 서비스” 사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욱 뜨겁게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혁신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속도바이오에서 내세운 소재사 전략기술에 유전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전자 분석 플랫폼도 기업 유전자 정보 맞춤형 생물의학 분야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DTC란 의료기관에 아닌 유전자 검사 기업이 소재자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개인 유전정보를 분석해 맞춤 질병, 알코올 대사

관련 질환에 대한 유전형질 예측부터 병력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사업은 바이오소재와 연관관계가 유전자검, 산업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그럼 관련혁신성장사업 구체화해설이라 하면 사업 선행을 거쳐오는 경우 DTC 유전자 서비스 사업자들은 본격 제작한다. 유전자 분석 연구개발(R&D) 기술과 기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DNA칩 생산기술과 유전자 및 유전자정보 분석관련 장비개발과 연구소, 유전자검을 유전자 플랫폼에 연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연구개발 중심으로 DNA칩 생산업체 등에게 중점 연구사업도 진행

한다. 당초 연구 관련혁신성장사업에 참가하든,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협력 수요조사 ▶별·제도 검토 및 규제개선 사례조사 ▶투자유치 목표 산업군 선정 및 산업협력 계획 ▶산업협력 중점지원 정책 수립 ▶최종 최종결과서 등을 제시한다.

신청서 접수처는 [www.bio.go.kr](http://www.bio.go.kr)

#참고 3. 투자계약 언론 보도현황 (2019. 2. 1.) - 기호 · 인천 · 중부일보 등



대전광역시 동구

# 04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도로의 노면을 이용한 그림자 조명 광고, 불법인가요?



대전광역시 동구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면서 신개념 그림자광고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아보네가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그림자 조명은 안전, 경관조성, 교육, 시정 홍보, CEPTED 등의 효과가 뛰어나고 이미 전국에 5,000여대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자 조명을 적용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 17개 시·도 조례(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인도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투사할 경우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애로사항을 신산업규제(IoT)로 규정하고 규제개선에 착수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주)아보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신산업 IoT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업체의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요 쟁점인 표준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바로 이어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끊임없이 업무 협조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 이후 “도로의 노면”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

### 현행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제17호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12호 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 개정(안)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 3. (생략)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1. ~ 6. (생략)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4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결과

그림자조명에 대한 관련 법규와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개정하여 그림자조명을 합법화 하였다. 그리고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개척으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림자조명의 합법화를 통해 CEPTED, 보행신호 보조장치 등을 통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확대가 기대된다.



중도일보(2019. 5.16.)



머니투데이(2019.5.16.)

인. 터. 뷰.  
INTERVIEW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공보실 김중국



현장에서 규제를 묻고 답을 찾아 해결하다

대전 동구는 관할구역의 상당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가 쉽지 않는 곳, 다시 말해 “규제개혁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수많은 기업의 현장을 발로 뛰며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구는 기업의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묻고 답을 찾아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21개 업체를 방문하여 50건의 불편사항을 묻고 답을 찾아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 2018년 10월에는 그림자조명 제작업체인 (주)아보네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그림자조명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현황, 공식성과 효과성, 규제 개선 후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국무조정실 신산업 IoT 분야 규제 제출하고, 신산업 규제혁신 권역별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회의, 민관합동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규제

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규제 소관부처 담당자, 기업, 대전 동구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기업은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구에서는 그림자조명 광고의 합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소관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규제개혁 위원들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당 부분 동구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드디어 2019년 7월에는 핵심 규제인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을 이끌어 내어 그림자조명 광고를 합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산업 광고 분야 판로개척으로 매출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동구에서는 위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현장에서 구민, 기업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 울산광역시 |

## 05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맥주, 와인과는 달리 왜 전통주에만 총산도 규정이 있나요?



## 추진배경



울산시 소재 '복순도가'는 국제 행사의 건배주, 만찬주, 주류 품평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주이다.

맥주, 와인과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도를 달리한 2종의 탁주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탁주 총산도 기준초과로 제품출시를 포기하였고 제품출시 시 기존 규정에 따라 탁주 세율(5%)보다 높은 기타주류 세율(30%)이 적용되어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는 산도제한이 없는 맥주, 와인이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생산, 유통하여 세계적인 술로 부상하게 된 것과 대조적이며 전통주가 다양한 제품생산 및 유통으로 세계적인 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도 규정 개선이 절실했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울산시에서는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울산지역 탁주 제조업체인 복순도가를 방문하여 탁주의 산도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유통에 애로가 있음을 파악하였고「식품의 규정 및 규격」의 총산도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식약처 및 중소기업 읍부즈만에 건의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중소

기업 옴부즈만 주재「민생규제 현장토론회(‘18.9.17)」을 통해 해당기업이 직접 참석, 산도 규정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업체와 울산시의 규정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19.3.13.)에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산도 규정 개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 결과 「식품의 규정 및 규격」이 개정되었다.(‘19.7.25.)



총산 규정 삭제는 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전통주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소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룬「주세법」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주류써 한식 식문화와 어울리는 발효 콘텐츠인 전통주의 다양화는 한식의 세계화와 더불어 와인, 맥주와 같은 세계적인 술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복순도가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유통으로 전통주 수출실적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주요 내용
  - 가.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 체계 정비
    - 1)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발생
    - 2)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
    - 3)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관능의 제품 출시로 주류 시장 활성화
    - 4)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비

#### 복순도가 수상실적

- ◆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공식 건배주 선정(‘12년)
- ◆ 대통령 재외공관장회의 공식 만찬주 선정(‘13년)
- ◆ 샌프란시스코 국제 와인 주류 품평회 금상(‘15년)
- ◆ 영국 주류품평회 MSC 은상(‘15년)
- ◆ LA국제 와인 경영대회 동상(‘15년)
-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공식 건배주(‘15년)
- ◆ 농림축산부 주관 우수문화상품 (K-Ribbon) 선정(‘16년)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17년)
- ◆ 하이 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선정(‘17년)

### ! 전라북도 익산시 !

## 06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입지 확정에 따라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및 관련 기업의 유치로 많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양됨
- ▶ 불합리한 법령의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만 및 입주 예정 기업의 요구로 기업유치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요구됨

※ (미래형 신산업 지원 / 기업애로 해소 / 농·어촌지원 / 지역발전 기반조성 / 지역관광 활성화 / 주민생활 불편해소 / 기타)



❶ 산업단지와 관련 도로 등 기반시설 시행기관이 달라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달리 받는 등 토지보상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공사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대규모 집회 예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78조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단지 안에 편입된 대상자만 이주자 택지 공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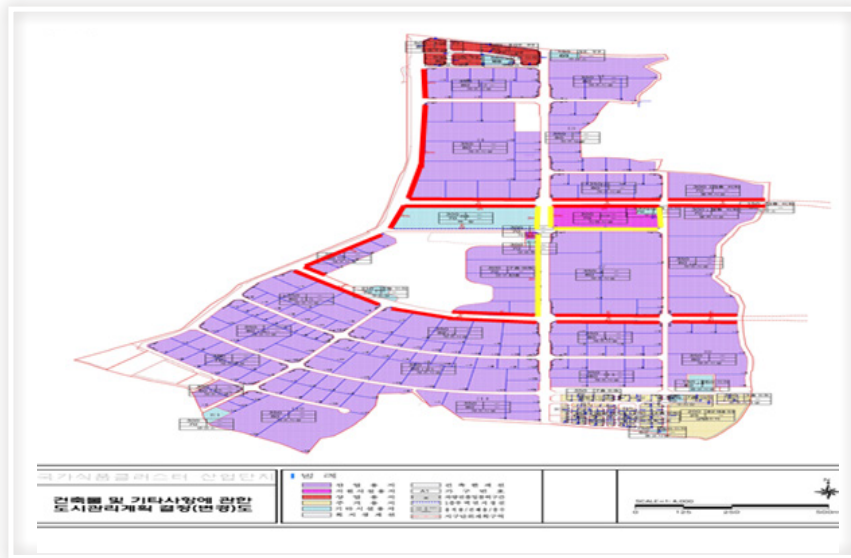


## 사 례

구 분	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공급	일반분양	
분양가 기준	조성원가(511천원)의 70%		
분 양 가	357,700원	800,000원	
분양면적	80평 기준	동 일	
분양금액	28,616,000원	64,000,000원	12,000,000원

❶ 식품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전체 식품기업의 78.8%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다른 국가산업단지와는 전혀 다른 사정으로 산업시설 내 건축한계선, 중·대형 필지, 지원시설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는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저해요소로 작용

▶ 건축한계선 조정 요구 : 소규모 영세기업의 규모에 비해 건축한계선이 너무 넓어 일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



※ '13년 기준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2조 4천억원으로 이 중 상품김치는 1조 2천억원(51%)

▶ 소규모 필지 요구 : 소규모 기업규모에 따른 중·대규모 필지가 아닌 4,959㎡(500평) 정도의 소필지 요구가 많아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

▶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설립 불가 : 지원시설용지에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여 R&D, 상업 등 지원시설은 가능하나 임대형공장 등에서 공장등록이 불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 플랜트(공장),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의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중 파일럿플랜트의 경우 주요 기능이 시험생산 및 소량생산(OEM)으로 입주기업 생산지원(OEM생산)을 위하여 공장등록이 불가피한 실정

❶ 식품대기업의 조건부 투자 유치 제안 : 국내 식품 대기업인 \*\*\*은 중국산 김치와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국내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고 김치 중주국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투자하겠다는 의견 제시



## 규제혁신을 위하여

### I 토지소유주, 보상 관계기관의 설득 및 관련 법률 개정 노력

❶ 공사 반대 추진위원회와 수차례 협의 및 간담회 실시

- ▶ 공사 및 준공 이후 기업 취업 방안 등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합의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 ▶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방법 변경, 이주자 택지공급의 애로사항 단계적 도출
- ▶ 관계기관(국토부, LH공사)의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선정, 채권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 방안 강구

❶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편입자 이주자 택지 공급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4항

## 관련 법률 개정 노력

- ▶ 토지보상법의 모순점 관련 규제발굴 : '16. 09.
- ▶ 국무조정실 개선대상 규제 선정 : '16. 10.
- ▶ 토지 보상 관련 법률 개정 : '18. 4.

## II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노력

- ❶ 식품기업의 규모 및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과감한 변경 시도
  - ▶ 1건의 개발계획 변경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❶ LH공사 방침 변경 : 수차례 협의, 내부검토를 통해 방침 변경
- ❶ 산업부 협의 : 지원시설에 대한 공장등록은 용도가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식품기업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협의 시도
- ❶ 국토부 승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 분양한 토지주에 대한 특혜 등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기존 국가산업단지와의 차별성 부각 및 사업실패 위험성을 인식시키려 노력

## III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건의

- ❶ 김치 전문가 간담회 개최('17. 5. 30) - 김치 지리적표시제 추진 건의



- ▶ 김치협회 및 농식품부에 김치 지리적표시제(PDO, PGI) 도입방안 건의
- ▶ 농식품부, 김치협회, 김치연구소 등을 수차례 출장하여 정부 정책과제 선정
  - ❶ 지리적표시제 유럽위원회 등 방문



유럽위원회



유럽의 지리적표시 정책 설명

- ▶ 지리적표시제 유럽위원회(벨기에), 모데나 발사믹 식초협회(이탈리아) 등 PDO, PGI 관련 기관 해외 벤치마킹 실시('18.3.26)
  - 익산시 주관으로 농식품부, 김치협회, 세계김치연구소 참여



「토지보상법」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소유자간 갈등해소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 유치 등 74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4,245억 원의 투자와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PDO) 원료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단계가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 (PGI) 원료의 생산, 가공 중 하나만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 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❶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선정, 채권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보상방법 변경 완료
- 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문제를 해결하여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사기간 내에 완공

## II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완료

- ❶ 3차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으로 지원시설을 복합시설 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벤처 기업 37개사 입주 완료하였으며 건축한계선 변경 및 소필지화로 21개 소규모 기업을 유치
- ❷ 지원시설용지는 공장 설립 및 등록이 불가하여 복합시설 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식품벤처센터에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1차 개발계획 변경('16. 8) : 복합시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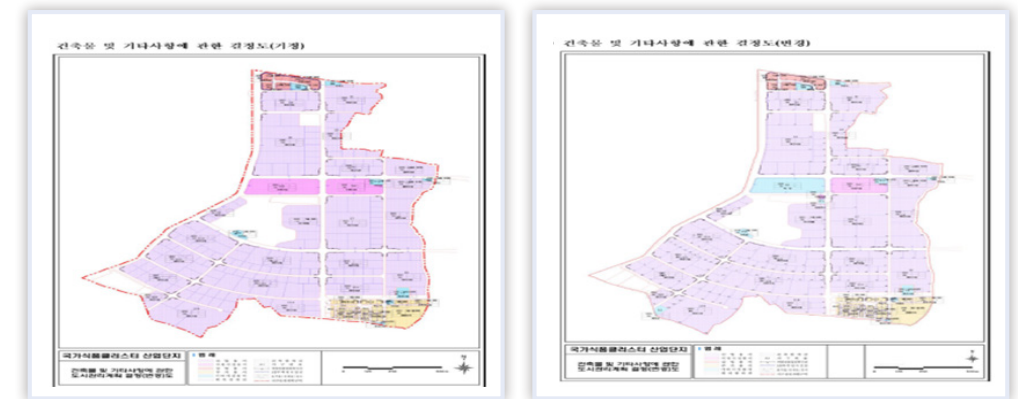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지원시설용지	52,675	-	감 52,675	
복합시설용지	-	52,675	증 52,675	

- ▶ 3차 개발계획 변경('17. 8) : 건축한계선 변경 및 소필지화  
- 건축한계선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D	I2, I4 ~ I10, I12, I15, D1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규제)</li> <li>-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li> <li>-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li> </ul>
S	S1, S2, S3		
L	L1 ~ 2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S	S3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규제)</li> <li>-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li> </ul>



## II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❶ 한국김치 지리적표시제 추진으로 국내 식품 대기업 \*\*\*\* 유치 성공(300억 투자, 55명 일자리 창출)
- ❷ 농식품부에서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 (18.12월)하였으며 「김치산업진흥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추진 중



- ① PDO, PGI라는 지리적표시제는 국제간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김치에 이제도를 도입하면 해외 김치 시장에서 무분별한 상표 남용으로 시장이 교란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김치 중주국 위상 및 한국김치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예상

## 풀무원, 익산에 최첨단 김치공장 완공...“김치 세계화 새로운 시작”

“연면적 3만329㎡...연간 1만 이상 생산 가능  
미·중 넘어 동남아·유럽시장까지 확장 목표  
이효율 대표 "풀무원 김치 월마트 판매 시작”

풀무원이 최첨단 김치공장을 완공하고 글로벌 김치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풀무원은 지난 24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글로벌김치공장' 준공식을 갖고,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김치를 생산해 미, 중, 일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풀무원은 1년간 300억 원을 투자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3만329㎡(9175평)에 지상 3층의 김치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포기김치부터 맛김치, 백김치, 깍두기, 석박지 등 다양한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김치를 하루 30t, 연간 1만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수출용 김치공장중 가장 최신 공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김치수출량은 2만8000여t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의 김치는 세계 68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푸드가 됐다"며 "풀무원의 바른기업 이미지와 초현대식 김치공장을 통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김치를 생산해 대한민국 김치의 자존심을 지키고 김치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일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열린 '풀무원 글로벌김치공장 준공식'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김치공장의 새출범을 축하하는 '배추 커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는 “한국최초의 김치박물관을 30여년간 운영해온 소명의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 김치세계화라는 새로운 글로벌도전에 나섰다”며 “글로벌유통망을 통해 외국김치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한국 고유김치를 미국, 중국시장을 넘어 일본, 동남아, 유럽까지 확장해 글로벌 넘버 1 김치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풀무원은 1991년부터 해외사업을 전개해온 글로벌역량을 기반으로 우리김치를 미국 최대유통인 월마트에 입점, 판매를 개시했다”며 “중국에서는 O2O 신흥강자인 알리바바의 허마센성과 회원제 최대유통인 샘스클럽에서 질찬리에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4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준공 '풀무원 글로벌김치공장' 내부.

이번에 가동을 개시한 풀무원 글로벌김치공장은 IoT(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공장)’이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제조 과정 중 맛이 계속 변해 고객이 원하는 숙성도에 맞춰 출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풀무원은 이를 김치발효과학 연구와 첨단 기술로 극복했다. 풀무원식품 박은영 김치사업부장은 “한국 교민시장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의 메인스트림 시장을 공략해 진정한 김치세계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라북도 남원시 |

07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공장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고 싶어요



추진배경

2011년도에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1지구에 입주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 (주)하이코리아는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2017. 7월 기존 공장으로부터 약 400m 거리의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제2공장을 신축하였다. (주)하이코리아는 제2공장 신축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본사인 기존 제1공장과 신축한 공장 제2공장이 분리되어 공장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시간 낭비 등 업무 능률이 떨어져,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장집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하이코리아 제1공장  
(기존 사업장 / 노암1지구)(주)하이코리아 제2공장  
(확장투자 사업장 / 노암3지구)

규제혁신을 위하여

남원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중 (주)하이코리아의 공장이 분리되어 기업운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1공장에 대한 추가 확장이 필요하여 증설투자를 하고자 하나, 제1공장 부지협소로 인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장 · 이전 사업장 제1~2공장

남원시 투자유치팀은 (주)하이코리아에 제1공장을 신축한 제2공장 인접부지로 이전 증설투자하여 공장 집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였으나, (주)하이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사후 관리기간(5년) 내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2호)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2호)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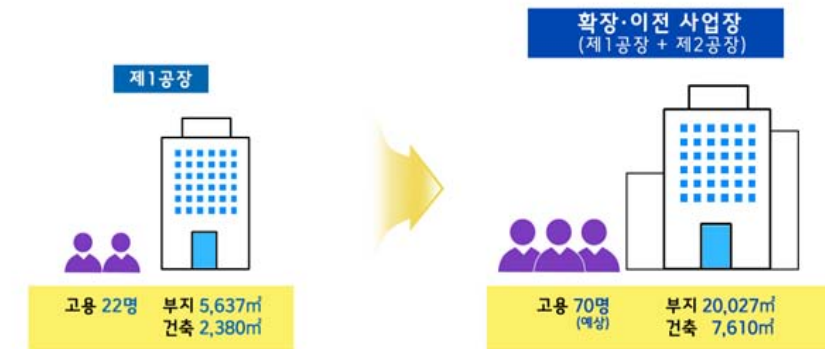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이에 남원시는 산자부에 기존공장 확장이전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 요청하였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전북도청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로부터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전 가능토록 승인하겠다는 구두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2018. 12월 남원시는 (주)하이코리아 제 1공장 이전계획서 제출하고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주)하이코리아의 제1공장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결과

(주)하이코리아의 공장이 집적화됨에 따라 기업설비투자가 확대되어 고용규모가 제1공장 운영 시 22명에서 70명으로 증가되고, 인건비 지출규모가 연 15억원(※ 최저임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장 집적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매출액이 기존 11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가하여 기업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 연간 매출액





전라북도

# 08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새만금산단 임대요율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1%인데 왜 국내기업은 왜 5%인가요?



## 추진배경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SOC 등이 열악하고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속도가 늦어지면서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은 매립지로서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파일 시공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및 타산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용지(국공유재산)를 조성하여 기업에 제공하였으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국내기업의 투자외면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국내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임대요율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과 새만금산업단지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투자여건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북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적용되었던 국공유지 임대료를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기존 5%→변경 1%) 적용하는 내용으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하였고,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17. 12. 22)를 거쳐 '18. 12. 31. 개정 공포되었다.

또한, 전북도는「새만금사업법 시행령」개정 협의 과정에서도 국유재산 임대요율만 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던 당초 개정안에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임대요율도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19. 1. 15.)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을 방문하여 반영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라북도 제출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공포('19. 3.26.)되었으며 '19. 4. 1.부터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의 임대료를 적용받게 되었다.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당초 개정안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중간 생략)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공포 시행령(전라북도 의견반영)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최장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입주가 쇄도하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개사에서 최대 4개사에 불과했으나, 임대용지 공급을 시작한 지난해 8개사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17개사로 급증했으며 계획대로 투자되면 신규 일자리 5,0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한 장기임대용지 감면 혜택이 기업 부담을 낮추는 투자 유인책이 되면서 새만금산단 기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12. 10.(월)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등  
국내의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익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권한

회에서 개발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 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된 데는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안호영 두 지역출신 의원 이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춘석 의원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이 의원은 회의를 열리기 전, 다른 법제위원들에게 새만금사업법의 필요성, 기대 효과를 알리며 설명하는 등 이번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었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공공유지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현행 법률 등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도 가능해졌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로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

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3000여만에 이르던 연간 임대료가 48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입주 등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익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전북도민일보(2018. 12.10.)

2019. 4. 1.(월) 전민일보

### 새만금 투자 국내기업, 외투기업과 동일 혜택

새만금청,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임대료 대폭 하향·임주 절차 간소화  
4월부터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투자혜택을 제공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로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특법 개정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

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3000여만에 이르던 연간 임대료가 48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입주 등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익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전북도민일보(2019. 4.1)

2019. 6. 5.(수) 전북일보



### Global Energy 미래에너지 선도기업 (주)레나인터내셔널 새만금 공장 착공식

4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린 (주)레나인터내셔널의 공장 착공식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왼쪽)와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제공= 새만금개발청

## ‘기회의 땅’ 새만금 투자 유치 줄이어

###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착공식 장기임대용지 핵심동력 부상 도, 올 9개 기업과 협약 체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협약 및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지난 4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 간 임대 가능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10월 33만㎡를 매입·공급한데 이어 내년까지 67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용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약 1300원/㎡)로 감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 입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전기차,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전기차 제조·부품 기업의 집적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주)레나인터내셔널은 4일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주)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 장기임대용지 7만 6000㎡에 555억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육상·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이번 투자로 120여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레나인터내셔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달 중 입주계약을 체결할 전기차 제조기업 나노스씨는 중국의 체리자동차와 함께 새만금 산단 33만㎡에서 반조립 방식의 전기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국가에 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전북일보(2019. 6.5)



# 09 | 경상남도 창원시 | 현장중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다!



폐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데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다하여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 아닌가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취수시설 상류 일정지역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낙동강 하류유역에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의 13개 시·군 68개 읍면동이 규제를 받고 있다.

금속가공시설에서는 고속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하여 수용성 절삭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공정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게 됨으로써 낙동강 유역에서 입지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 내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은 911개로, 그 중의 90%인 817개가 기계산업이 주력업종인 낙동강유역 경남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단속적발 시 공장폐쇄 대상) 기업 활동에 큰 장애로 작용, 지역경제계의 숙원과제가 되었다.



2016년 3월 창원지점은 창원·김해지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창원 6개소, 김해 1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하였다.

창원시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업체로, 수용성 절삭유는 순환조 내에서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고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금속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지역 산업계가 받는 심각한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규제개선 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조실·환경부·행안부(구 행자부)·중기부(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낙동강 상수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완화 불가 입장이었으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에 학술용역 수행,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와 5차에 걸친 지역 간담회 등 끈질긴 협의 끝에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6. 11.~ 7. 1.)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창원시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창원형 폐절삭유 순회 수거시스템 도입, 개별입지 기업의 산단 내 이전 시 자금 지원, 환경단체와 합동 민관 공동모니터링 강화 등 자체적인 상수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인접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규제개선 공감대를 조성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폐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의 예외적 허용, 산단 밖 개별입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산단으로 이전 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므로써 기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로써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 입지한 창원시 60여개 기업체를 포함하여 김해·함안지역 등의 817개 기업체가 폐쇄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11,000여명의 일자리를 보전하게 되었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관리체계 정비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영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상수원 및 환경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규제완화 해법 마련 과정에서 지역기업 및 환경단체, 주민,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부단한 현장 소통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대표적 사례로 나머지 전국 5개 유역(한강, 임진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대한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경남신문

2018년 10월 12일 (금) 11면 경제

도 "낙동강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해달라"

국무조정실 순회 간담회서 건의

경남도는 11일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와 합동으로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직접 순회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이동진 사무관을 비롯해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 창원시 등 10개 시·군의 규제개혁담당 등 25명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밀양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 등 10개 시·군의 11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며 해결방안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지자체 예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업무 혁신방안과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종훈 기자

19.0 X 6.8 cm

경남일보(2018. 10.12)

경남신문

2018년 11월 14일 (수) 02면 종합

RG특례보증 확대로 중소 조선사 숨통 틔운다

정부, 경남 민생규제토론회서 밝혀 무역보험공사 지원금 1000억 확대 70억 이상 보증가능... 내년 3월 시행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중·소 조선사의 RG특례 보증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지난 8월에 금융권의 심사기준 중 일부를 완화했으며,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RG특례보증 지원을 1000억원 확대하고 보증규모도 기존에는 70억원이 한도였지만, 7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 3월께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도 제조업 외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행안부, 국토부, 국제청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건수가 연간 1만5000여 건에 달해 정책 개선의 실익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을 통합폐업신고 대상에 추가해 어디에서나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의 입지 제한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누출·유출은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 없는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지규제 위반 재발방지 대책, 철저한 관리, 규제지역 신설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관리조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읍부즈만,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 박정호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 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훈 기자

25.8 X 10.6 cm

경남신문(2018. 11.14)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 건의



환경부 주관 제5차 지역간담회 광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기업 현장방문(2019. 7. 2)

# 10 | 경상남도 함양군 |

##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국내기준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추진배경



현재 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성시험(낙하시험) 국내 시험기준은 국제기준(수출용) 2m, 국내기준(내수용) 4.9m로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함양군 함양일반산단에 입주한 전기버스 제작 업체인 (주)에디슨모터스는 전기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제품의 이원화 제작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부담 및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시험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함양군은 (주)에디슨모터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안전성시험 중 낙하시험 높이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안전기준시행세칙에서 기준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그 결과

구동축전지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며, 함양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개년 공장 2동 추가증설로 인한 사업 확장 등 신규 고용창출 100여명, 연100억원 매출 신장 및 전기 자동차 1,000여대 생산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호영 님의 규제·애로 건의 결과 회신	
담당자	장이랑 전문위원 (02-730-0703)	등록번호	2019-0059
소관부처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2853)	접수일자	2019.2.1
제 목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낙하시험) 시험기준 완화		
<p>○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구동축전지의 낙하 안전성 시험기준이 4.9m로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원가 상승 및 수출이원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p> <p>- 주요 해외국의 경우 2m 이내임</p> <p>○ (건의사항) 낙하 안전성 시험기준을 2m 이내로 하향 조정</p>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개선 <input type="checkbox"/> 정기추진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input type="checkbox"/> 이첩·철회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의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p> <p>○ 국내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은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며, 당시 국제기준이 없었습니다.</p> <p>○ 2018년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제기준(UN GTR No.20)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u>안전기준시행세칙</u>*에서 기준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p> <p>*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 별표1 48.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p> <p>** 추진일정 : 시행세칙 개정 추진('19년 하반기)</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의견을 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관련법령	자동차의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		
중 소 기 업 옴 부 즘 만			
<p>전문위원 장이랑      현장애로담당관 조아라</p> <p>우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a href="http://www.osmb.go.kr">http://www.osmb.go.kr</a></p> <p>전화 02)730-0703 / 전송 02)2100-4941 / 공개</p>			



| 경기도 안양시 |

# 11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로 13조 시장 진입



세계 유일의 원천기술인데 품목도 급여도 신설해 줄 수 없다구요?



추진배경



경기도 안양시는 2017년부터 기업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특히 신기술 분야에 규제의 산재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규제혁신」을 핵심시책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17. 9.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나,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3년간의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노력 끝에 규제를 개선, 13조 세계시장 진입을 도왔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성이 많은 의료기기로 지목하고 지난 70년간 대체기술 개발을 권고해 온 의료기기가 '의약품주입펌프'이다. '의약품주입펌프'는 중환자·암환자·영유아 체내에 고위험·극독성 약물을 정확한 용량과 속도로 주입하는 생명직결 필수기기인데, 기존 제품은 주입량 오차, 감염위험, 혈액역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 FDA가 관련 의료사고만 연간 6만여 건을 보고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인 (주)메인텍이 기존 의약품주입펌프의 치명적 단점을 모두 개선한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인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를 2007년 개발하여, 2010년 국내 및 세계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16년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세계 최초 원천기술 제품을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다. 임상을 완료하고 세계가 극찬한 기술이었지만, 원천기술의 핵심인 전용 소모품(실린더식 카트리지)의 품목이 신설되지 못하고, 별도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원천기술의 경우 국내의 기준이 곧 해외시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안양시는 생명직결 필수기기인 의약품주입펌프의 치명적 부작용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약물주입을 통한 중환자·암환자·영유아의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원천기술 세계시장 독점 진입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던 기업 규제해소를 위한 도전에 착수하였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안양시는 2019. 8. 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개정에 따라 규제가 최종 개선되기까지 지난 3년간 품목의 신설·예비급여의 결정·보험급여에 대한 약물주입속도 제한규제 개선 등 5단계의 큰 산을 넘어 왔고, 각 단계별로 국내 사례가 전무하여 개선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다.

시는 우선 난해한 의료기기 인허가 및 보험급여 관련 법령·지침과 기업의 신기술과 관련한 임상 논문·FDA 문건·산업보고서 등을 심도 있게 연찬하고, 기술개발진과 백여 차례 소통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산업적 관점의 기대효과를 증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의공팀 실무진과 이십여 차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현장 규제를 재차 확인하여 소명하였다.

치열한 연찬과 다양한 전문가의 심층인터뷰, 중앙부처 협업을 통해 삼십 여 차례



나 건의 과제를 설득력 있게 보완했고, 경기도 ·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채널로 10여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다.

특히, 경기도가 안전 상정을 추진한 국무조정실 주재「기업 합동간담회(‘18. 5. 8.)」를 통해 ‘18. 8월 예비급여 책정과 ‘18. 10월 품목 신설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하여 규제가 최종 개선되는가 싶었는데 ‘18. 12월 보건복지부가 약물주입속도에 따른 급여 제한 규제를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기업의 시장 진입에 원천적 제동이 걸리고 만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었던 안양시는 ‘19. 1. 일반적인 규제 개선 트랙으로 과제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업에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제안하고 신청서 작성, 자료의 보완, 근거자료 제공 등 기업을 전 방위 밀착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19. 3. 약물주입속도에 따른 급여 제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추가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차례의 국조실 등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19. 4월 드디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한 금액 조정을 전제로 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얻었고 ‘19. 8. 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으로 규제가 최종 개선되어 기업은 드디어 13조 세계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안양시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전문적인 노력으로 범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생명 살리는 신기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가. 급여대상 1) 8세 미만 소아 - 이하 생략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액유량 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 이하 생략 -
	나. 치료재료 1) 수액유량조절세트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 3)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다. 다만, 상기 나.의 2), 3)은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약물주입속도가 5ml/h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도 사용불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업은 개발한 세계 유일 우리의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로 13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혁신 성장이 기대된다.

8월 규제개선 후 10월 현재 40여개의 국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콰타르, 요르단 등과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해 매출액이 30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는 올해 총매출액이 300억

원, 5년 안에 3조원(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전체규모를 훨씬 뛰어 넘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어 국내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연간 6만여 건이 보고되는 기존 제품의 치명적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세계 최고의 약물주입 정밀도 구현으로 중환자·암환자·영유아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朝鮮日報

2018년 08월 31일 (금)  
사회 12면

## “규제에 절망... 차라리 해외로 가려 했었죠”

첨단 의료기기 2년간 1대도 못 판 ‘메인텍’... 이젠 “500명 뽑을 것”

“두 달 전만 해도 기술을 갖고 해외로 떠나려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규제에 막혀 아무것도 못 했지만 앞으로 회사를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의료 기기 회사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의료 기기를 만들고도 규제에 막혀 지난 2년간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한 중소 의료 기기 제조업체 메인텍.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메인텍이 만든 의약품 주입 펌프 ‘애니퓨전’을 기존 펌프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별도 보험 수가를 책정했다. 700원대 기존 수가는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엔 해당 2만5000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오는 10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 메인텍 본사에서 만난 이상빈(58) 대표는 “일본 올림푸는 내시경 렌즈 원천 기술 하나로 연 7조원을 번다”며 “우리 고유 기술로 연 9조원 규모 의약품 펌프 시장에 뛰어 들겠다”고 말했다.

애니퓨전은 매년 전 세계에서 의료 사고 5만건을 내는 기존 의약품 주입 펌프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의약품 주입 펌프는 영·유아나 중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할 때 주로 쓰인다. 하지만 펌프에 삽입하는 주사기에 다시 약물을 보충하거나 주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주사용 약물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외부 감염이 원인이었다. 이 대표는 용량이 적은 주사기 대신 대용량 약물 주머니를 직접 펌프에 연결하고 그 중간에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원형 실린더 카트리지를 부착한 애니퓨전을 개발했다. 카트리지가 회전하면서 약물을 빨아들이고 밀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식이다. 그는 “약물 주입 오차율을 기존 ±20%에서 ±2%까지 줄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가천의대길병원 등의 임상 시험 결과, 기존 펌프보다 약물 주입량이 정확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하지만 2016년 식약처는 핵심 기술인 카트리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판



이상빈 메인텍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 펌프 ‘애니퓨전’ 앞에서 웃고 있다. 이 대표가 들고 있는 실린더 카트리지(동그란 부분)가 펌프 오작동을 막는 핵심 기술이다.

신기술 적용한 의약품 주입 펌프 수출 계약만 1000억원 달했지만 국내 허가 늦어지며 파산 위기에 “이젠 9조원 세계 시장 도전할 것”

매 허가를 내줬다. 메인텍의 카트리지는 기존 의료 기기 품목에 아예 없었던 기기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아내 자금난에 빠졌다. 애니퓨전 개발비로만 40억원을 썼는데, 링거용 수액 조절기 수출로 연간 3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는 버티기 힘들었다. 세간의 기대와 달리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자 수출 계약을 타진

했던 해외 바이어들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10억원 대출도 올해 만기가 돌아왔다. 이 대표는 “대출을 돌려막고 아들과 딸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며 버텼다”며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지만 다 부질없이 특허를 들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승인으로 연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이란·인도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국내 허가가 늦어지면서 실제 수출은 지지부진했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향후 3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스마트폰·반도체 분야 최고가 됐지만 원천 기술 없이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없다”며 “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의료 기기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벤처들의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형태 기자

MedicalTimes

전체기사 의료정책 병원·개원가 학회·학술 제약·의료기기

의료기기

혁신적 ‘의약품주입펌프’ 국산 의료기기 신기원을 열다

차세대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 ‘애니퓨전’(Anyfusion)

정희석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9 11:58

0

주입편차 ±1%대 정확도·감염 위험 최소화

‘애니퓨전’ 세계시장 공략 시동

국산 의료기기 신기원을 연 애니퓨전은 혁신적 원천기술에도 불구하고 품목신설(중분류)·허가·보험 등재 등 엄격한 규제환경 때문에 수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수년간 규제 장벽으로 국내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내수 판매실적이 없었던 이유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는 기존 인퓨전·시린지 펌프와 비교해 주입 정확도가 개선되고, free flow가 방지돼 과량주입 위험성 차단과 함께 수액세트 교체가 필요 없어 감염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입 정확도 증가 등 장점은 미숙아나 일부 내과영역 등과 같이 소량 주입이 필요한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애니퓨전용 실린더카트리지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를, 5ml/h 이상이면 ‘선별급여’(본인 부담 80%)를 상한가 2만1150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애니퓨전 핵심기술인 실린더카트리지가 별도 산정돼 국내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일본 쇼세카이 임상센터 ▲삼성서울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수행한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급종합병원 대모를 통해서도 정확성·안전성·편의성 등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은 애니퓨전은 보험급여 등재로 상급종합병원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메인텍은 국내 병원에서 애니퓨전에 대한 실사용 임상자료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빅데이터 레퍼런스로 확보해 기존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빈 메인텍 대표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 기술만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혁신 기술로 무장한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 애니퓨전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국산 의료기기 성공모델로서 의료기기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인. 터. 뷰. INTERVIEW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규제혁신... 그 끝없는 좌절과 도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다섯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 세계 유일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가 개발 11년 만에 드디어 13조 세계시장에 독점 진입하고 혁신성장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 최고의 약물주입량 정확도와 감염차단 등으로 중환자·응급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제품의 치명적 부작용으로 인한 6만 여건의 의료사고도 예방하여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신기술 규제혁신의 길은 두렵고 힘들었으며 수많은 위기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위법령에 산재한 규제 확인의 난해함, 신기술 고도의 전문성, 기업우호적 전문가 발굴의 어려움, 정량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기술의 혁신성 입증, 시장 및 산업적 관점의 기대효과 분석, 기득권의 반발과 압력,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기업의 위기 등으로 쉬운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 밤새 연찬하고, 수시로 현장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병원 및 기술진을 방문했으며, 설득력 있는 건의서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규제혁신 협업 중앙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했고 10차례 넘게 다채널로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잠 못드는 날도 많았고 주저앉고 싶은 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고된 여정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 기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규제가 개선되기까지 경기도·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들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문가의 적극행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증제 추진을 통해 시 지방규제혁신의 기반과 프로세스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안양시의 특별한 규제혁신 비전과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의 혁신사례를 용기 있게 추진해 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행정에 큰 박수





## 인. 터. 뷰.

INTERVIEW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_ 조윤주



를 보내드립니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중점 시책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의 밀착지원을 통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트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최초 지자체이기도 하며,

다양한 신산업 현장경험과 많은 실패경험을 통해 확립된 신산업 규제혁신 노하우로 실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자율주행 AI 실험용 차량의 자기인증 면제로 일반도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여 스마트AED의 임시허가를 이끌어낸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풀 규제를 개선하여 신기술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스타트업도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주목할만 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대비 금년 국내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수는 9

배나 증가하는 산업군의 확대가 있었으며, 해당기업의 매출액은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은 시장 독점에 따른 혁신성장 효과로 그 경제적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더욱 더 추진과정 상의 어려움과 특별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나의 적극행정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갖게 된다면, 생명과 건강·더 나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끝없는 실패와 좌절의 히스토리를 극복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해볼 것을 다짐해봅니다. 끝으로 지난 3년 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 경기도 양주시 |

## 12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동일한 토지인데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경기도 양주시는 능원금속(주) 및 (주)뉴옵틱스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후 소유권 보존 등기시 과도한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서를 받았다.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에 따른 신규 보존등기시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 운영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 토지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보험수수료가 발생하였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양주시에서는 상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등기규칙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그 다른 등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양주시는 권익위, 경기도, 안행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대법원에 건의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관련 법무사 및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냈다.

이와 같은 성과는 KBS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크게 보도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월경 서울우유 양주신공장이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다시금 보증보험수수료 비용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선 사례의 경우는 기존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승인받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건물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서울우유 같은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건물이 없어 대안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경기도 건의과제로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마침내 법원행정처로부터 건의과제 수용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2018. 12. 4일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 토지개발 등기규칙(2018.12.4.)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을 규칙으로 제정)

제2조(신청요건)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 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신설〉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능원금속(주), 뉴옵텍스(주)는 각각 4, 5억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우유의 경우 약 20억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번 등기규칙 제정으로 불필요한 등기처리 기간이 30일 단축될 것이며 전국에 조성중인 166개 신규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자에게는 약 2,000원억의 비용 절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주시, 계속되는 규제개선 노력 ... 기업 성장 이끌어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1-07 12:38 | 승인 2019.01.07 13:12 | 댓글 0 | 언어 선택



양주시청사

[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며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주요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 2019. 01.07 일요신문 )





인. 터. 뷰.  
INTERVIEW

경기도 양주시 규제개혁팀 \_ 송득한



##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 결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기 등록 규제를 개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수도권 및 군사 규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수십년간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고, 특히 기업분포가 영세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기업들의 입지규제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성주군 |

# 13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분류코드가 없어서 조달 ·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된다고요?



추진배경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 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3D프린트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 · 나라장터에 상품 등록을 할 수 없어 다변화하는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국내 · 외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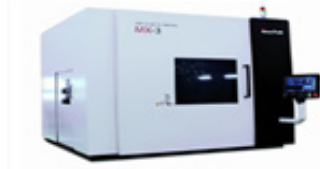
'19년 정부 규제개혁 중심과제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 · 개선하기 위하여 성주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던 중 관내에 위치한 3D프린팅 기업을 방문(2018.12.12.)하여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였고, 그 중 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 부재로 인한 물품 판매 시 애로사항을 접하고, 과거 금속 3D프린터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개정 건의를 통한 관련 코드 취득으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낸 선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016.03.15.)

(기존) 유사 분류코드 적용



(개선)한국표준 산업분류 코드 취득

금속 3D프린터  
3D프린팅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개정 신청사례 (2015.05.18.)



또한, 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 부재로 인하여 복잡한 절차를 통한 수익계약 또는 조달·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불법 유통하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2019.01.15.)와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 ICT융합분과위(2019.02.27.)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3D필라멘트의 품명이 신설되어 분류번호를 부여받게 되었다.



품명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다변화하는 삼차원프린팅 산업 국내·외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기업규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업애로를 적극 반영할 수 있었다.

3D필라멘트 품명을 신설하기 위해 조달청은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신설 상품 목록심의회의를 개최(2019.03.08.)하여 “3차원프린터필라멘트” 품명을 신설(물품분류 번호 : 23261601)하였고, 상품정보시스템에 반영(2019.03.19.)되어 현재 조달·나라장터에서 신속히 상품 판매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에 조달청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월에 비로소 조달청을 통한 3차원프린터필라멘트에 대한 구매 입찰이 가능해졌다.

PART 1 |  
미래형 신산업 지원

PART 2 |  
기업애로 해소

PART 3 |  
주민생활 불편해소

PART 4 |  
사회적 가치 실현

지금까지는(AS-IS)

- 新산업에 대한 新제품(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 부재로 인한 복잡한 절차를 통한 수익계약 또는 불법 유통
- 다변화하는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응하지 못함(수동적, 정형화)

앞으로는(TO-BE)

- 新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적법한 거래 행위 및 시장경제 활성화
-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한 국내·외 시장 제품 런칭 (적극적, 다양화)



조달청(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0903245-00호

2019. 09.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계약번호 : 001960767-00
- 세 부 품 명 : 3차원프린터필라멘트(세부품명번호 : 2326160101)
- 구매예정수량 : 2,000,000
- 단 위 : kg
- 추 정 가 격 : ₩ 63,63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차원)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9.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과 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정리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5일~10월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정리를 받아야 함



3차원프린터필라멘트 품명 신설 및 조달 등록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2019.01.15.)



3D프린터 생산공정 현장방문(쓰리디코리아)

## | 강원도 동해시 |

14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민간투자 활성화

동해항, 광석 전용부두에서 친환경 부두로의 전환 필요치 않을까요?



## 추진배경

해양수산부는 동해항을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선율 해소와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지원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1조 6천억원을 투입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항만 기본계획에는 동해항을 석탄, 시멘트, 기타 광석 전용부두로 한정하고 있다.

(주)대우건설에서는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에 사업비 1,833억원을 투자, 잡화부두를 건설하여 영동지역 발전업체에 친환경 연료인 우드 펠릿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동해항이 광석 전용부두로 제한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동해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해항 내 잡화부두 건설이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해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기업체 면담과 동해항 화주·선사 초청 설명회,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계 기관 협의, 국무조정실 주

관 규제 건의, 동해항 기반시설 확충 사회 단체 건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함으로써 2018. 9. 11일 동해항 3단계 기타광석 부두(5만DWT급) 1선석을 동해항 인근 화력발전소의 발전원료 공급을 위한 잡화부두로 계획 변경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 동해항 3단계(신항) 개발계획 변경(2018.9.11. 해양수산부 고시)

변경전					변경후				
구 분				2016 ~ 20	구 분				2016 ~ 20
접안 시설	동해 지구	석 탄	10만 DWT급	1	접안 시설	동해 지구	석 탄	10만DWT급	1
		기타광석	7만 DWT급	1			기타광석	7만 DWT급	1
		기타광석	5만 DWT급	3			잡 화	5만 DWT급	1
		시멘트	5만 DWT급	2			기타광석	5만 DWT급	2
	합 계			7		합 계			7



## 그 결과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유치가능 물동량이 연간 6만7,820TEU 및 비컨테이너 60만톤, 4,31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9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2,753명 인원의 건설현장 투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우드펠릿과 콜드체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가능한 복합항만이 개발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



(주)대우건설 잡화부두 건설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년 ~ '23년(3년6월)
- ▶ 위치및부지 / 면적 : 동해시 구호동 전면 해상지역/135,300㎡
- ▶ 사업내용:잡화부두(5만톤급) 건설(투자 1,833억, 물동량 연간 6만7,820TEU)



동해 신항 잡화부두 조성사업 본격화

KM에 타당성 조사용역 통과  
5만t급2023년 완공 목표  
비용 절감·경제 발전 기대

남진현 jnam@kado.net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동해 신항 5만t급 잡화 부두 건설 사업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역경제와 동해항의 활성화를 위해 동해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해 추진 중인 '동해항 3단계 개발지구 5만t급 잡화 부두' 건설 사업이 최근 민간자본 유지의 판단지표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과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동해 신항 잡화 부두의 유지 가능 물동량은 연간 컨테이너 6만7820TEU,비컨테이너 60만t으로 추정했다.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4315억원,부가가치 유발효과 1490억원,노동유발효과 2753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다른 용역에서는 강원도 내 화력발전소의 우드펠릿 운송 시 현재 운송되고 있는 부산항·광양항·포항 영일항에 비해 운송거리가 단축돼 동해 신항의 물류비용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동해 신항 5만t급 잡화 부두는 총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안벽시설 300m,면적 13만5300㎡ 규모로 추진되며,오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은 8월 해양수산부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동해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10월 사업시행자 선정,11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타 지역 항만을 통해 공급되던 동해권의 기존 및 신규 화력발전소 우드펠릿 물량의 동해 신항 잡화 부두 반입으로 화주들의 물류비용 절감,동해 신항 조기 활성화,지역경제 발전 등이 기대되고 있다. 남진현



동해항 3단계 개발계획(조감도)

동해 신항 잡화부두 조성사업 본격화('19.07.15. 강원도민일보)

동해 신항 잡화부두 조성사업(19. 07. 15.강원도민일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15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애로사항 해소



성동구 건축행정은 타 구청에 비해 제한사항이 너무 많지 않나요?



추진배경



성동구청은 지역 건축사회와 타지역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식의 건축규제가 완화가 아닌,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중 불합리하거나 개정이 요구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피부로 와닿는 건축규제 완화를 해야겠다는 모토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건축규제 완화는 민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진하여 실효성이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닌, 규제완화라는 행정적인 실적을 위한 규제완화가 되어 왔으나 성동구에서는 일방적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서로에게 왜 규제완화를 해야하며, 왜 규제를 해야했는지에 대한 상호간의 얘기를 들어보고 소통을 통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건축사들이 처음으로 소통을 통한 규제완화가 되자 대단히 만족하였으며, 성동구청 건축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동구 건축계획 · 심의 가이드라인		
변경 전 : 후 비교		
연번	현행기준	변경(안)
1	-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등의 다락계획은 지양하며, 단독주택 등 주택의 최상층은 제한적으로 허용	- 오피스텔에 대하여 다락을 허용하되 (다락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추가 설치), 도시형생활주택 중수완화 받은 건축물의 최상층은 다락설치 제한
2	- 발코니 최소폭은 1m 이상으로 하며, 발코니 확장은 원칙적으로 실당 1면만 허용 - 발코니는 확장 전 외벽선이 정리될 수 있도록 벽선을 일치	- 발코니 최소폭, 허용면수 및 벽선 일치 규정 폐지 (발코니 내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불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이상 신축 (설계변경으로 기준 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 (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개정
- 11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단, 너비 4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10세대 이상부터 자문 (용도변경 등 포함)	- 삭제	폐지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 · 신고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 · 신고	현행유지
- 30실이상의 고시원의 건축 (용도변경 포함)	- 30실이상의 고시원의 건축 (용도변경 포함)	현행유지
-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고	- 삭제	폐지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 신축 및 용도변경 (주거밀집지역 :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 신축 및 용도변경 (주거밀집지역 :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현행유지
-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건축행위 단,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신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증축 등 제외	- 삭제	폐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신축건축물은 6m도로에 접하도록 하며, 4m도로의 경우 1m후퇴하여 계획)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신축건축물은 6m도로에 접하도록 하며, 4m도로의 경우 1m 후퇴하여 계획)	현행유지

자문대상 (변경 전 · 후 비교)

16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규제애로 개선 건의는 어디에 합니까?



## 추진배경

2015년 부산광역시는 지역 기업이 규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애로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을 운영하였다.

2019년부터 산업관련 전시회 등 행사장에 규제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구·군 포함 114회 현장을 방문하여 1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를 실시하고 6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단체 방문 및 전시행사장내 규제상담 부스 운영



## 규제혁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체 규제에 대하여는 주무부서 설득과 의회 협력을 추진하고 전문적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선토론회 및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을 통한 전문가의 토론 및 자문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불수용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개선한 중요 사례를 보면 자체과제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경시설 설치 대상으로 인한 애로를 건의 후 89일만에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례와 IoT 신제품 제조업에 대한 신속한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추가로 공장등록을 위한 별도 공장 확보없이 조달납품을 통한 기업판로 확대에 연매출 200억원 증대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중앙과제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대상 제외로 불필요한 공사비 60억원 투입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차별적인 가중치 적용을 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제품 설치건축물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1/3 단축하도록 하였으며 소방드론의 운용을 제한하던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긴급 상황시 소방용 드론의 즉시 현장 투입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



## 그 결과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운영을 통하여 기업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규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제혁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경제 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민·관·기업의 관심을 증대한 성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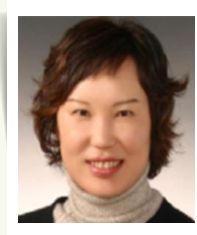




인. 터. 뷰.

INTERVIEW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장 \_ 박은자



##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규제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으로 최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으로 우수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성과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부산광역시 및 구·군 규제업무 담당직원들의 노력과 규제관련 중앙부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하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시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혁신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규제신고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이라는 애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산업관련 전시회장에 규제신고 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시민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사례집에 소개된 사례와 같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에 의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 생활 불편해소



## 3 PART

116	01_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121	02_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124	03_ 서해5도 어장확장으로 평화와 경제의 바다 열어 간다
127	04_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129	05_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134	06_ 똑똑혁신! 생생행정! '제도개선 동아리' 를 통한 '건축규제 혁신'



| 경기도 고양시 |

01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자체도 할 수 있나요



## 추진배경

고양시의 약 48%, 127.44km<sup>2</sup>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군사규제 피해현실 기초조사와 군 전문가의 전략적 제안 등을 검토한 종합 논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군 당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고양시는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해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국방부에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여 해제한 것이다.

군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40여 회의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거나 수해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에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프로그램(Q-GIS)을 구축해 군부대에 보급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선, 서식 표준화 등 각종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7.6km<sup>2</sup>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18.6km<sup>2</sup>)은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로 약 경기개발연구원 『군사시설 피해실태 연구(2008)』에서 제시한 ‘자산가치 손실 추정방법’적용

12조6천억원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만 명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민원 접수 시 통상 1개월이 걸렸던 군협의 기간이 1일 로 단축되었고, 전산조회 프로그램 구축으로 민원처리담당자(군·관)가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로 오랜 시간 권리 행사를 제한받았던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개발연구원 『군사시설 피해실태 연구(2008)』에서 제시한 ‘자산가치 손실 추정방법’적용



최신기사

##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등 협의 빨라진다

송고시간 | 2018-04-18 08:47

f t s ... | + -

표준서식 만들어...필수 사항 명사·첨부서류 최소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軍)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고양=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시와 군이 표준 서식을 만드는 모습. 2018.4.18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nsh@yna.co.kr

고양시 군사협약식



인. 터. 뷰.  
INTERVIEW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조영주



##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각종 공공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군사규제 피해현실 기초조사와 군 전문가의 전략적 제안 등을 검토한 종합 논리를 개발해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하고자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sup>2</sup>) 및 행정위탁(18.6km<sup>2</sup>), 군협의 서식 표준화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규제 해제는 군 당국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관례였기에, 우리시 주도로 군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0여 회의 실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불편 개선이라는 최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관이 협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준 시장님, 실·국·과장님, 실무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행안부, 경기도 주관 경진

대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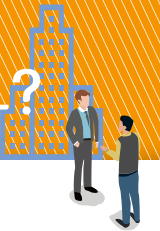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규제 개선에 지자체, 중앙부처,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지정 해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고양시는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평화경제특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규제로 인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았던 시민들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02 개발제한구역내 목욕장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없나요?



개발제한구역내 목욕장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없나요?



2017년 1월 부산 기장군 정관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 건립 요청이 있었다.

목욕장은 대표적인 대중 생활편익 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민간 개인·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대부분이 도심 속 오지이자 대다수 주민이 이동이 곤란한 노인층이 거주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법령 개정을 통해 다중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였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기장군은 먼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그해 9월에 선정되었으나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없음을 회신,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함을 회신해 왔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개정안 및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원을 설득하여 2018년 3월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조 요청,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규제개선 노력을 통하여 2018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되어 2019년 4월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 정 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마. 주민공동이용시설
  -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목욕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개 정 후(18.12.4.)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마. 주민공동이용시설
  -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목욕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다중규제(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복지시설 및 여가활용 시설 등이 전무하여 소외받아 온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입면도



## 03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서해5도 어장확장으로 평화와 경제의 바다 열어 간다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추진배경

서해5도는 NLL해역과 인접한 서해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천안함사건, 연평해전 및 포격등의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서해5도 어업인들은 야간조업도 할수 없으며 군사훈련으로 인한 조업통제 및 잦은 기상악화로 어로활동이 연간 약 150여일에 불과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업인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불안한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

또한 좁은 어장에서 반복적인 조업으로 인해 어장 생산성마저 많이 떨어져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조업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어장확장, 조업시간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하고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에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건의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안보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장확장의 최적기라 판단하여 지난해 5월에는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12월에는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 건의와 수차례 해양수산부, 국방부,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마침내 올해 3월 25일 최대규모의 어장확장(연평어장 815km<sup>2</sup>→905km<sup>2</sup>, 대청 D어장 신설 154.55km<sup>2</sup>)과 그동안 55년간 금지되었던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19.3.25. 『어선안전조업규정』개정으로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기존 1,610km<sup>2</sup>→ 1,855km<sup>2</sup>, 여의도면적 약 84배)되었으며 야간조업 1시간 허용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조업을 규제해왔던 서해 접경지역의 조업 여건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서해 5도가 평화의 바다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의원, 원내대표 등이 방문할 때마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연장을 요청

충청북도 제천시

04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이 이렇게 쉽다고요?



추진배경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민원인은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지적도, 현황측량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현황측량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소에 대행을 해야 함에 따라 80~100만원 정도의 비용과 1주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하천 등점용허가 연장신청은 연간 150건에 달하는데 민원인은 반드시 시청 건설과를 방문해 연장신고서를 접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을지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

제천시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하천 등 점용허가 및 연장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 등점용허가 신청 시 경작 목적의 단순 토지 점용의



서해5도 어장확장 관련 언론보도 자료



( 2019. 02.21 경기일보 )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위성사진을 근거로 현황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민원인은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천 등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할 경우 제천시 남부면(수산·덕산·한수)은 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점용허가 신청자 대부분이 경작을 하는 고령층으로 시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연장신고 대상자를 미리 관내 모든 주민센터에 보내준 뒤 읍·면·동 직원이 신청인의 신분과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청 건설과로 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19년에는 8건의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연장신고의 경우에는 130여건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다.

항상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생활 속 규제를 혁신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민이 살기 좋은 제천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제천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충청북도 제천시 남부면(수산·덕산·한수)은 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점용허가 신청자 대부분이 경작을 하는 고령층으로 시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연장신고 대상자를 미리 관내 모든 주민센터에 보내준 뒤 읍·면·동 직원이 신청인의 신분과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청 건설과로 보내는 방법이다.

##### 1 점용허가 신청 및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필요로 해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 복잡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 후 설계도면을 작성, 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토지점용 허가신청일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교량, 담, 울타리 등)이 포함되는 점용 허가일 경우는 이진과 같다.

또 단순 토지 점용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통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러 기존에는 점용허가 기간(최대 5년)이 만료될 경우 시청 해당부서를 방문해 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업무개선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민원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임을 배려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18.8.27. 동양일보)

(18.8.27. 동양일보)

경기도

## 05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추진배경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훼손지 복구 제도개선을 추진 적극 추진하였다. 최근 GB 내 훼손지가 부족하여 훼손지 복구비율이 급감('09년 71% → '17년 11%)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해제사업시 공공기여를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도는 판단하였다.

또한, GB 내 공원을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훼손지 복구대신 납부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일부만 GB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등에 활용되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

○(개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도록 '09년 도입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 (훼손지\*의 정의)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

\*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필지

규제혁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GB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복구사업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18. 4.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이번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자체 지역현안인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한편, GB 해제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도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km<sup>2</sup>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주민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 휴식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촉진 및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안양 인덕원지구, 부천 괴안·원종 공공주택사업, 김포 고촌 공공주택사업 등이 추진중으로 공원조성 시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부천 원종·괴안 공공주택사업 훼손지 복구계획〉

- ▶ 위 치 : 부천 원종동 일원
- ▶ 사업면적/훼손지 복구면적 : 280,000㎡ / 42,000㎡
- ▶ 사업내용 : 부천 근린공원 조성 (복구사업비 150억)



(18. 8. 27. 동양일보)



**인. 터. 뷰.**  
INTERVIEW

경기도 지역정책과 박인찬



###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경기도의 규제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 경진대회에 발표자로 처음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그 날을 돌이켜 보면 본선에 올라온 10개팀중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어 심적 부담도 컸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심사위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자 팀원들과 같이 준비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네요.

‘20.7월 최초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를 개선하고자 17.6월부터 사례조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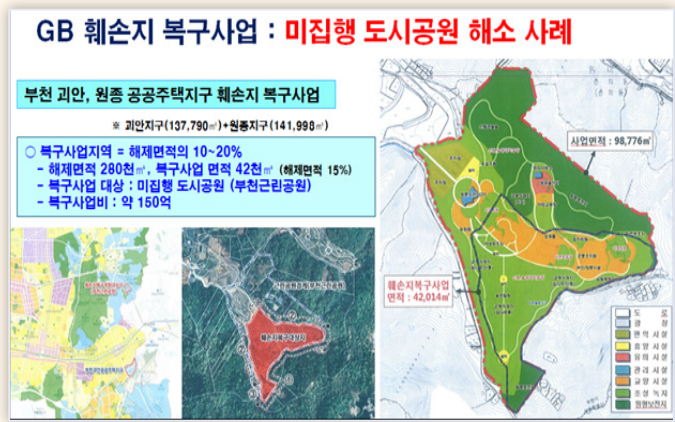
그 결과 18.4월 “미집행 도시공원”을 훼손지 복구대상에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주민, 도, 시·군이 1石 3兆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현행 : 건축물·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공원·녹지 등 조성)

주민은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 도는 보전부담금 재정적 불이익 해소, 시·군은 미집행공원 해소로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제개선의 첫 걸음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위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합리적 대안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규제개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무 중 불합리한 부분 찾아 보세요.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은 무한대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집행 도시공원해소 사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06 '똑똑혁신! 생생행정!' '제도개선 동아리'를 통한 '건축규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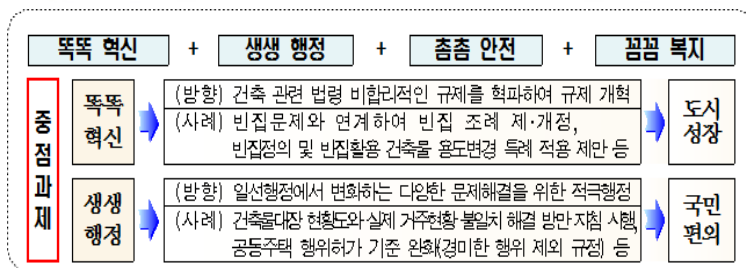


일선행정에서부터 불합리한 규제발굴 ·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 추진배경

건축 관련 법령은 대표적 규제 분야로 일선행정에서 '시대착오적 규제', '규정자의 해석'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다분하다. 중앙부처에서부터의 건축 관련 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진 현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시대착오적 규제가 법령에 산재하다. 따라서 지역주민, 지역경제와 함께 숨 쉬고 있는 일선행정에서부터의 규제개혁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축·주택관리과 전 직원 '제도개선동아리'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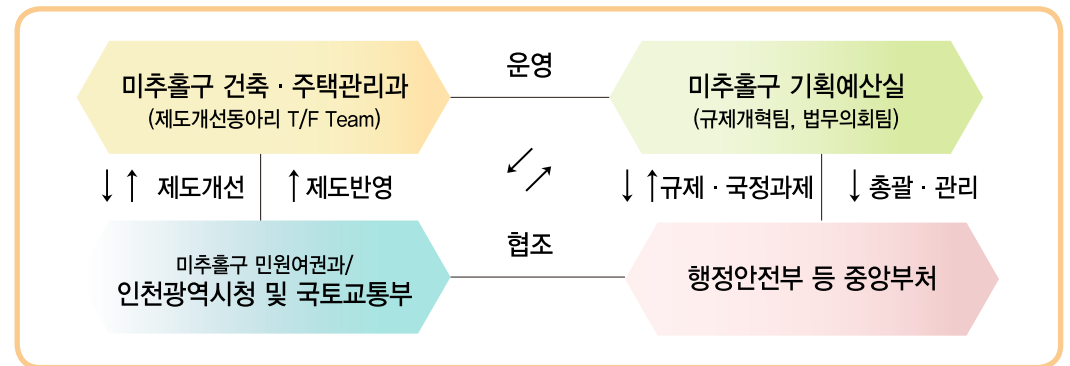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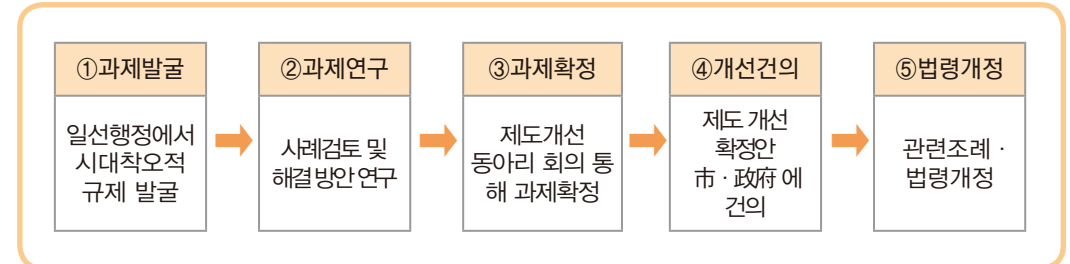
※ '똑똑혁신, 생생행정, 촘촘안전, 꼼꼼복지' '제도개선 동아리'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특히, 도시성장 · 국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중점과제로 선정, 건축규제혁신 실현

## 규제혁신을 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2010. 1. 21.부터 건축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추진으로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제도개선동아리'를 통하여 현안을 발굴하고 사례조사 및 연구를 통해 과제를 확정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려움 및 제안부터 법령 개정까지 시간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겪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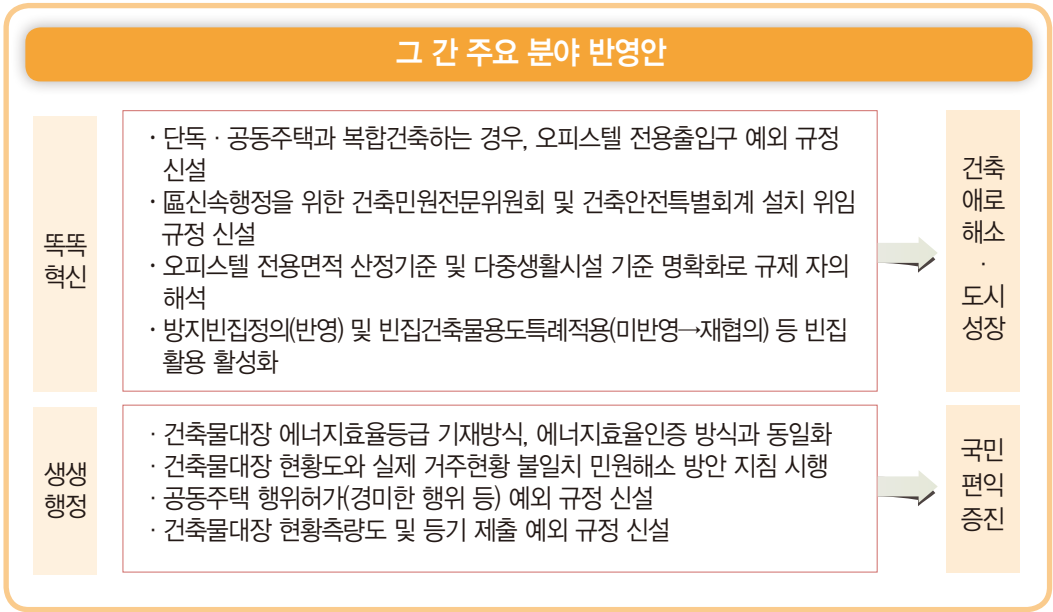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개선안은 자체사업 및 내부규정 제 · 개정을 우선 시행하였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수 · 구청장 협의회 및 관계 협회에 협조 요청, 중앙부처 법령 담당자 면담 요청 등 미추홀구는 제도 개선에 적극 행정을 펼쳤다.

※ 2018. 1. ~ 2019. 6. 주요 제도개선 제출 안건		
분 야	제도개선 안건	
똑똑 혁신	개선	용도변경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건축물 완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유휴용지 활용 제안
		시·구 건축심의·건축허가 대상 일원화 개선
	완화	조경기준 완화(공동텃밭 조경 인정, 옥상조경 의무면적 완화 등)
생생 행정	개선	건축물대장 에너지효율등급 기재방식(서식) 개선【반영】
	완화	공동주택 의무 관리 대상 예외 규정 마련(완화)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에 따른 대지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그 결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2010. 1. 21.부터 건축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추진으로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 계
발굴 반영	8 3	15 3	10 4	9 2	8 3	26 5	23 2	18 3	117 25
반영 비율	37.5%	20.0%	40.0%	22.2%	37.5%	19.2%	8.7%	16.7%	21.4%



최근(2018년 1월~2019년 6월) 자료로는 29건의 제도개선 제안 중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에 관한 규칙」에너지효율등급 단위 일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개선이 반영되었고, 「주택건설기준 규정」 경비원 등 휴게실 규정 신설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제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실효성 있는 ‘건축·주택 분야 제도개선동아리’의 꾸준한 운영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제도 연구 모임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일선 건축 행정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 사회적 가치 실현

## 중부일보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014면 사회 미추홀구, 정부에 건축법령 개정 요구

건축제도개선 동아리 회의 거쳐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18건 건의

인천 미추홀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미추홀구는 올해 건축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 회의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 법령 18건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회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건의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 원인이 취약 지질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안전 대책을 세웠다.

우선 '토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건축물 안전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반조사·굴착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m의 굴착이 수반되는 소 규모 건축공사장에도 관계 전문가와 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기존 10m에서 5m로 절반 감축됐다.

자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많지만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미추홀구 건축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는 현재까지 총 135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부로부터 법령 24건을 개정시켰다.

특히 지난해에는 뒤바뀐 집 등·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진행해 국토부가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 불일치 관련 민원해소 방안'이라는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현진기자



건축법령 개정 추진하는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건축법 개정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미추홀구청

### 제도개선 동아리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호일보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004면 종합

### 미추홀구, 건축분야 규제개혁 '구슬땀'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개선  
무분별 난립 방지 등 성과 특출  
올 1분기 6건 과제 발굴해 건의

인천시 미추홀구가 건축분야 규제 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건축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자치법 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운영된 건축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는 현재까지 총 14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고, 27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 개선은 기존 1천% 이하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440~750% 등으로 차등 적용돼 무분별한 난립을 막은 바 있다.

이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개선, 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을 높이 제한과 고밀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여가·취업·주거 등·호수 바로잡기 사업과 주택·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을 높이 제한과 고밀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여가·취업·주거 등·호수 바로잡기 사업과 주택·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을 높이 제한과 고밀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동아리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거쳐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동안 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인천시 등 소관 부서에 건의했다. 이번엔 건의한 과제는 ▶주거복합건축물 허가단위 범위 개선 ▶건축물 철거명실신고 범위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편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안내관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는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만 중장기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월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현대일보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005면 인천

### 건축분야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보여

#### 미추홀구, 제도개선 동아리 6건 과제 발굴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분야 규제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추홀구는 2019년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 1/4분기 총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인천시 등 소관 부서에 건의했다.

과제는 주거복합건축물 허가단위 범위 개선, 건축물 철거명실신고 범위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편,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안내관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는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만 중장기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월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미추홀구가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 등 운영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

## 01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심장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 추진배경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의학 기술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여,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되어 있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심장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120분이지만 전국 시군구의 62.7%가 발병 후 응급실 도착까지의 골든타임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도착이후에도 응급실 내 많은 대기인원, 검사와 진단, 치료준비로 인해 중증응급환자가 장시간 체류되고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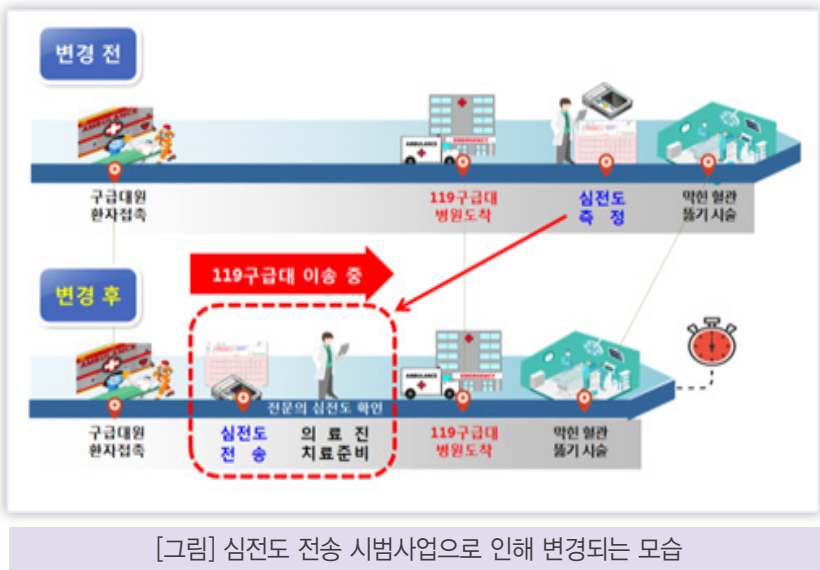
## 4 PART

- 141 01\_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 147 02\_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사업자재원 신설로 소외지역 공급방안 해소
- 149 03\_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 153 04\_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 개선

### 규제혁신을 위하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아대 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센터)과 업무협약을 통해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현행법상 의료규제로 인해 119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도,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도 모두 저촉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임시적인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은 병원도착 이후 진행되던 심전도 검사를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 의심환자를 접촉한 시점에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인근 병원에서 시술팀을 대기시켜 병원도착 후 치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급성심근경색환자 소생을 위해 치료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에서 권고하는 소요시간 90분 보다 평균 11분을 더 단축시킨 시범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제된 사항을 바꿀 수 없어 정규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웠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을 추진 하던 중 해당 의료규제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언론보도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게시되고 총 3,593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관계부처에서는 규제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2019년 5월에는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그 결과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진 않았지만 전국단위의 새로운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범사업은 심전도 측정 외에도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등 응급환자 소생에 필요한 처치항목을 추가하여 추진 중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20년간 멈춰있던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의료규제 개선은 향후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 터. 뷰.  
INTERVIEW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_유동균



## 공직자의 적극 행정이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전국단위 경연대회 행사에 참여한 것에도 모자라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의 현업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 준 구급대원들과 동아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로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필요한 규제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산업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과제와 같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 나열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식 규제는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그 규제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규제라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할 것입니다.

이번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한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을 통해 심장환자의 골든타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노력이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져 의료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행이 유지되어오던 병원 밖 응급의료에 대한 의료규제 개선은 심



인쇄하기 닫기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심전도측정·땀줄 절단 포함

기사입력 2019/06/30 12:00 송고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7월1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시행 지역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종류에 모두 7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땀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감실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감실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을 더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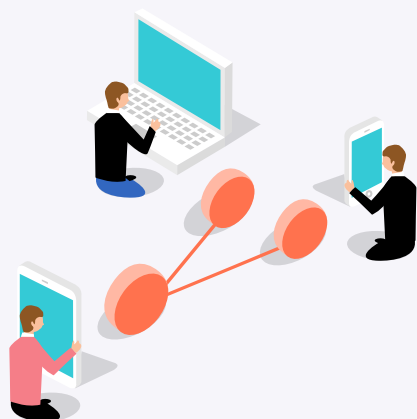
기존에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기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등 측정 등 10개 응급처치를,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구조사 업무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까지 모두 15개 응급처치를 하게 돼 있었다.

(연합뉴스 219. 6. 30)



장환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대전광역시 |

## 02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사업자 재원신설로 소외지역공급방안해소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대전시는 단독주택지구, 원도심 등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투자를 기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와 업무협업을 통해 투자보수가산재원에 사업자재원매칭제도(+50%)를 제도화하여 “미공급·소외지역”에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재원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기에 “소외지역” 투자 의무화 제도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규제혁신을 위하여

대전시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운영한 투자보수가산재원에 사업자재원 매칭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도시가스 담당자공무원 간담

회의 개최 시 대전시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지역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산업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 시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④항에 투자보수가산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자가 추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2018.3.30.) 하였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에 감사

대전시 올해 1만 3941세대 도시가스 공급 ('19.02.01 금강일보)

경기도 남양주시

03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승객과의 의사소통 문제만 해결한다면,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진배경

청각장애인의 신체능력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하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들보다 취업이 어려우며,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 상 청각장애인도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함에도,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적극행정을 위하여

코엑터스(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고요한택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을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배치해 태블릿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이용해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 코엑터스(주)개발한 어플리케이션(GOYOHAN)이 설치된 태블릿을 운전기사석과 승객석에 설치,
- ✓ 상호간 의사소통 가능 3가지 소통방식을 제공 (음성, 태블릿 키보드, 터치패드), 목적지 전달 및 주행 중 메시지 전달 가능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2018년 9월)하고 보조금 지원절차 등 세부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2018년 12월)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3사, 코엑터스(주)와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2018년 12월)하였다.

프로그램 본격 시행(2019년 1월) 후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상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우려를 해소했다.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후 청각장애인 7명을 고용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설명회를 통해 2명을 추가 고용, 총 9명의 청각장애인이 택시운전기가 될 수 있었다.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기회 확대 및 택시 회사의 구인난 해소,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 및 인식 전환이 기대된다.



(‘18.12. 21. 국민일보)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_ 노현호



##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체적인 장애로 택시 운송사업 현장에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에게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택시기사 취업이라는 일자리 창출의 과정을 함께 한 사업담당자로서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8월 관내 법인택시 신안운수 관리자가 대학생창업동아리 코엑터스가 개발한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접한 후 이를 도입하여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청각장애인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소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9월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고용 택시업체 3사 및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코엑터스(주)가 함께 모여 업무협약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처음 접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표시하



는 민원이 시청에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설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 도입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에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설명회에 협조를 받아 '청각장애인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좋은 기획의도가 담긴 사업이라 EBS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알리면 알릴수록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구인난도 해소하며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설명회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지난 7월까지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9명이 관내에서 택시기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채용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고용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에서는 고요한택시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고요한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청각장애인의 채용 및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내 택시운수업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홍보부족으로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주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과 블로그 및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널리 알려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은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0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 개선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없나요?



2017. 7. 16. 충북지역에 총 피해액 547억 규모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청주시와 괴산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제외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2017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및 피해액(보은, 증평, 진천)

(단위 : 억원)						
구 분	청주	괴산	보은	증평	진천	비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피해규모	90	60	60	75	75	
2017. 7. 16. 호우 피해액	315	114	33	41	38	

규제혁신을 위하여

이에 충청북도는 ①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②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2개 면(산외, 내북), 증평군 2개 읍·면(증평, 도안), 진천군 4개 읍·면(진천, 백곡, 문백, 초평)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2회 7.26. 8.2.)와 국회 및 정치권에 수 차례 건의하게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18. 5. 8. 공포	
개정 전	개정 후
<p><b>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b> ①법 제6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p> <p>1. (생략)</p> <p>〈신 설〉</p> <p>2. 3. (생략)</p> <p>② (생략)</p> <p><b>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b>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② ~ ⑥ (생략)</p>	<p><b>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b> ①-----</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b> ① -----</p> <p>-----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그 결과

대통령 특별지시(17.7.27.)로 행정안전부에서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그에 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보은 17억, 증평 12억, 진천 11억) 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대통령 특별지시 (17.7.27.)로 행정안전부에서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그에 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보은 17억, 증평 12억, 진천 11억) 하였다.

<p><b>서울 Pn</b></p> <p><b>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 가능</b></p> <p>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1 23:20</p> <p>국가공무원 채용 필기 면제 면 서류전형·면접시험 꼭 거쳐야</p> <p>정부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국무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국무회의부터 정부 대변인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발표했다.</p> <p>기준에는 지진이나 홍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읍·면·동 지역에 자연 재난의 피해가 집중돼도 이 지역이 속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다.</p> <p>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인접 지역인 보은·증평·진천은 그렇지 못했다. 이 지역 읍·면·동 단위에서는 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집중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 <p><b>&lt;2018. 5.&gt;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읍면동 단위로 확대</b></p>	<p><b>서울 Pn</b></p> <p><b>‘호우 피해’ 전남 보성읍·회천면...읍·면·동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b></p> <p>입력: 2018-07-18 22:38   수정: 2018-07-19 00:22</p> <p>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로 처음이다.</p> <p>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13일 보성군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한 결과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p> <p>읍·면·동 단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p> <p>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았지만 인접 지역인 보은, 증평, 진천은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읍·면·동 단위에선 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소속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 <p>보성읍과 회천면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주택 침수나 농경지 유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p> <p><b>&lt;2018. 7.&gt; 읍·면·동 단위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b></p>
----------------------------------------------------------------------------------------------------------------------------------------------------------------------------------------------------------------------------------------------------------------------------------------------------------------------------------------------------------------------------------------------------------------------------------------------------------------------------------------------------------------------------------------------------------------------------------------------------------------------------------------------------------------------------------------------------------------------------------------------------------------------------------------------------------------------------------------------------------	-------------------------------------------------------------------------------------------------------------------------------------------------------------------------------------------------------------------------------------------------------------------------------------------------------------------------------------------------------------------------------------------------------------------------------------------------------------------------------------------------------------------------------------------------------------------------------------------------------------------------------------------------------------------------------------------------------------------------------------------------------------------------------------------------------------------------------------------------------------------------------------------------------------------

미래를 바꾸는 힘!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만든사람들** 지역경제지원관 **김장희**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경태**

서기관 **이재홍**

사무관 **원충희, 김민정, 박숙정**

**심상수, 허 정**

주무관 **이재우, 이웅기,**

**강병욱, 박영진**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전 화** 044-205-3998    **FAX** 044-204-8974